

회담대책개발관련 기초자료집

2001. 8

통 일 부
(남북회담사무국)

이 책자는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개최에 대비하여 분야별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개최한 세미나결과, 전문가 위촉과제결과, 또는 각과에서 추진한 정책검토결과 등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향후 회담개최 대비를 위한 기초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은 우리국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I. 남북회담 일반

- 1) 2001년도 남북대화 추진방향.....7p.
-정책자문회의(남북회담)결과보고
- 2) 남북회담 운영 개선 워크숍 결과.....14p.
- 3) 남북대화 비상임자문회의 결과.....21p.
- 4) 남북대화 타개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 결과.....26p.
- 5) 남북대화 타개방안 관련 세미나 결과.....29p.
- 6) 남북회담대표단 상호방문 관련절차.....32p.
- 7) 북한의 회상전략과 제2차 정상회담 추진방향(과제위촉결과)...34p.
- 8) 소강상태의 남북대화 타개방안 모색(전문가자문결과).....37p.

II. 정치·군사 분야

- 1) 북측 「2001년 통일대회」 개최 및 호소문 채택.....42p
- 2) 북방한계선 이북수역 해상구조 관련 대북연락체계
수립방안(안).....49p
- 3) 평화체제 구축 관련 과제위촉 결과.....52p.
- 4) 민주당 의원단 유라시아 철도를 통한 남북 관련.....53p
- 5) 미·중 관계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제위촉결과).....55p.
- 6) 국내여론 및 정치구조와 남북협상 전략 (과제위촉결과)....57p.
- 7) 북측상선 영해통과 관련 대응방안 (과제위촉결과).....65p.
- 8)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북회담 추진전략 (과제위촉결과).....68p.
- 9) 「통노회」 강령 통일방안 조항 검토 결과.....74p
- 10) 북한 미사일과 MD개발관련 논문.....80p.

III. 경제 분야

1) 남북대화(경협) 재개관련 세미나 결과.....	83p.
2)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계획 및 현황.....	86p.
3) 금강산관광사업 합의서 공개 관련 상황.....	94p.
4) 개성공단 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99p.
5) 경의선 연결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102p.
6) 남북이업협력 쟁점·방향.....	110p.
7) 남북해운운송의 문제점·대책.....	112p.
8) 경협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	114p.
9) 남북철도망(KTR)과 대륙횡단철도 연결.....	117p.
10) 민간 대북협상 유경험자 초청 간담회 결과.....	123p.
11)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추진현황.....	129p.
12) 남북진력협력 추진방향.....	132p.

IV. 사회문화·인도·적십자 분야

1) 사회문화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결과.....	136p.
2) 적십자회담 대표단 간담회 결과.....	138p.
3) 6.15 남북공동행사 실무집축 관련 회의 결과.....	139p.
4) 6.15 공동선언 1주년 기념 오찬행사 관련 질문·답변 자료.....	143p.
5) 6.15 공동선언 1주년 「각계 인사와의 대화」 결과.....	154p.
6) 「민족통일대토론회」 취재기자단 간담회 결과.....	157p.
7) 노르웨이 적십지사 국제부장 방한관련 동향.....	159p.
8) 대북협상 유경험자 초청 간담회 결과.....	162p.
9) 남북농민 공동행사 관련 동향 (1)~(4).....	166p.
10) 「2001민족통일대축진행사」 관련 추진본부 설명회참석 결과.....	173p.
11) IFRC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방문 관련 동향 (1)~(2).....	175p.
12) 남북관계 현황 및 추진 방향(남북대화 설명회자료).....	179p.

관공림담판

문서번호	남기3126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3. 22

작성부서	기획과(기획계)
과 장	손종수
작 성	이승신 사무관

2001년도 남북대화 추진방향

- 정책자문회의(남북회담) 결과보고 -

2001년도 제1차 남북회담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 사항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1. 3. 21(수) 16:00-18:10
- 장 소 : 회담사무국 회담장 3층회의실

○ 주 제 : “2001년도 남북대화 추진방향”

○ 참석자 :

- 자문위원 : 장달중(서울대), 김구섭(국방연), 김재홍(경기대),
고유환(동국대), 이종석(세종연), 윤덕희(명지대),
동용승(삼성경제연)
- 회담사무국 : 국장, 상근위원, 부장, 각 과장 및 관계관

2. 토의 내용

1.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배경 및 향후전망

〈북한의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배경〉

① 한·미정상회담

-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입장정리 필요성
- 한·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북인식과 남한 태도에 대한 불만
 - * 김대통령의 NMD 동조 및 「우방공조」 강조에 대한 항의 표시
- 한·미정상회담의 여파속에서 장관급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한 부담 고려
 - * 특히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장관급회담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이 북측을 자극

② 우리측의 대북 경제지원 문제

- 금강산관광·전력지원 등의 문제를 장관급회담과 연계
 - * 김한길 장관 방문시 금강산관광 대금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불만 표시

③ 제5차 장관급회담 의제문제

- 장관급회담 의제로서 김정일 답방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한 부담감

* 김정일 답방시기·방식 관련 북측이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④ 북측 내부사정

- 전금진 단장 등 대표단 주요인사의 건강악화 가능성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향후 전망〉

① 북측 입장에서 최근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조정기간 필요

- 4월 중순이전, 늦어도 4월말까지는 회담에 임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일 러시아 방문일정 및 방문결과가 변수로 작용

② 금강산관광·전력지원 등 대북지원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시점에서 재개될 전망

- 대북지원 문제에 대한 우리 내부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 하느냐가 관건

* 대북지원 관련 우리의 경제적 여력 확보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이 중요

2.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문제

〈북한측 입장〉

①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 대한 입장정리 후 답방시기 결정

-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미국의 태도를 지켜본 후 조건없이 전격적으로 응할 가능성
- * 북측이 또다시 남한 당국을 배제하고 대비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특히 벼랑끝 전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3년의 시간이 필요)

② 장기적 관점에서 김정일 답방은 불가피한 수순

-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답방은 답방시기·방식의 선택문제임.
- * 북측이 「약속 이행」 즉 “장군님은 약속하시면 지킨다”는 것을 김정일의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워 왔는 바, 이미 북한에서도 공개된 서울방문 약속을 무효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③ 답방에 대한 대가문제

- 6월 정상회담 이후 남한으로부터 기대 만큼의 경제지원을 못받았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남한의 지원 전망이 불투명하면 이는 답방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
- * 전력지원, 금강산관광, 기타 달러 소득원 제공 실행을 요구

④ 김정일 신변문제

- 과거사(KAL기, 아웅산테러 등) 청산문제, 답방 환영인파 교통수단 등 김정일 신변 관련 북한내 강경인사들의 반대 가능성
- * 특히 육로(미군이 관할하는 판문점 통과), 공로(김대통령 방북시 전용기를 능가하는 전용기 부재)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의선 개통시점(철도 이용) 또는 전용기 확보시점이 답방시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추진 전략〉

① 서울답방이 대미관계 개선의 유력한 대안임을 설득

- 남북대화과 관계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적이 부시행정부 설득과 협조요청에 「힘」을 실을 수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 * 특히 서울답방이 부시정부의 「불신」이 「믿을 수 있는 국가」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임을 강조

② 답방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분명히 제시

- 우리측이 줄 수 있는 이익을 사전에 분명히 하고, 답방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
- * 우리측의 대북지원 가능항목 제시, 국제사회의 지원 촉진, 북미·일 수교의 촉진, 국제금융기관의 북한진출 계기 등을 설명

③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행사 유도

- 미·중·일 등 주변국가의 국제여론을 활용한 대북압력이 필요함.

* 특히 부시행정부의 “김정일 담방에 대한 기대 표명” 협조 필요

④ 서울담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내여론 정지작업이 필요

- 김정일 담방시 제기될 수 있는 과거사 청산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내언론 및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

* 서울담방이 늦어질 경우 내년부터는 선거정국으로 돌입하는 국내 정세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미·북관계와 남북대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① 부시행정부의 부정적 대북인식

- 부시행정부는 아직 구체적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부정적인 대북인식을 표출

* 파월 국무장관 1.18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김정일을 “독재자”로 지칭, 부시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회의감(skepticism)을 갖고 있다”고 언급

② 대북정책 수단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김중」을 강조

-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 해결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
- * 최근 미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 국책사업인 NMD 추진을 위해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해 초강경입장으로 선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북한의 대미정책〉

① 북한의 확고한 대미관계 개선의지 불변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생존의 중심고리」로 삼아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입장
- * 북한은 조명록 방미시 채택된 공동코뮈니케를 「역사적인 외교문건」이며 “국제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조미 쌍방은 공동코뮈니케를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

② 부시행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

- 한미정상회담 이후 부시행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이는 본격적인 대미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 조성을 위한 전술구사 차원
- * “함부로 징거망동하지 말라” (평양 3.14 논평)

문서번호	회이3124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3.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회담2과)
과 장	조 원 규
작 성	소 봉 석

남북회담 운영 개선 워크숍 결과보고

1. 일반사항

가. 일 시 : 2001. 3. 28(수) 14:00~17:0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 3층

다. 주 제 : 남북회담 운영 개선을 위한 워크숍

- 제1회의 : 북한의 회담운영 변화 및 전망
- 제2회의 : 회담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라. 참가자

- 발 표 : 김인구(조선일보 기자), 김성근(한적 교류협력팀장)
- 토 론 : 석명학 사무관 등 회담사무국 직원

2. 발표내용

가. 북한의 회담운영 변화 및 전망(김인구)

(1)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방향

- 체제 수호를 우선으로 경제난 해소와 함께 국제사회 진출을 통한 북한체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주력
 - 대외 경제지원을 얻기 위해 부분적인 개방과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으며 김정일 위상 제고를 위한 대내외 사업 폭넓게 전개
- 경제적 실리를 위해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자세 시현(鄭周永 현대 전 명예회장의 빈소에 조문단 및 조화를 보냄)

(2) 남북대화 전략의 변화

- 남북 고위급회담(1990~'93)을 통해 '남북 불가침'에 합의한 뒤, 체제 보장을 위한 대미 관계 개선에 주력
 - 핵문제를 계기로 북미 제네바 합의 체결 이후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체제 위협이 없을 정도의 범위내에서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대남 접촉과 교류를 제한적으로 확대
- 국민의 정부 출범후 2년 정도 '포용정책'을 탐색, 대화를 하면 지원하겠다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취지를 이해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남북 대화에 계속 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베를린 선언'에서 종합적인 대북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화전략은 ① 보다 많은 지원 획득, ② 남한내 반북 분위기 완화

(3) 남북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의 목적과 행태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실사구시적 대화 패턴과 과거부터 해오던 냉전적 방식을 적절히 배합
 -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데 초점을 맞춰 대화에 응하되, 각론에 들어가는 기존의 대화 패턴이 나오고 있고 이는 기본적인 대화 전략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전술적 변화만 있다는 것을 의미
- '지원을 안 받아도 좋으니 자존심만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

(4) 전 망

- 북한이 아직까지 6·15 공동선언의 1항, 2항과 관련된 정치적 제안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 제안이 나올 경우 남북회담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정치적 제안은 경제적 실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결국 남쪽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와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적 문제
 - 주어진 경제력 하에서 북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줄 것이며, 이를 어떻게 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꿀 것인지 검토할 필요
 - 한편 국민들의 비판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회담에서 끌려다닌다는 인상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회담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김성근)

(1) 적십자회담 운영의 문제점

- 회담대책 수립시 유관기관 협조가 미흡하고, 회담운영에 있어 회담대표단의 재량권 전무
- 대표단 세부 업무분장 미흡, 상황실 운영·보고체제 및 보안의식 제고 등

(2) 개선해야할 사항

- 회담대책 수립시 관계기관 참여 및 회담대표단에 대한 재량권(융통성) 일부 부여
- 회담운영 지침서 공유 및 개인별 세부 업무 분장표 작성, 숙지
- 각종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공유 및 대표단 교육 필요

3. 주요 토의내용

□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는 이유

- 체제생존이 원칙적 목표이며, 94년 수해 이후 경제적 피해 발생에 따라 미국에 경제적 실리를 추구했으나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
- 미국이 정치적 빚장을 풀기 전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남북대화도 방향 선회

□ 5차 장관급회담 연기 관련 북한 의도

-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미비난 강도로 볼 때, 대미불만보다는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우리 역할(부시정부 설득 미흡)에 대한 실망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

□ 2차 정상회담 관련

- 김정일 스스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밑에서 답방을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
- 결국 남한내 분위기가 답방의 조건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대국민 설득 방안 모색 필요

□ 회담의 선행조건으로서의 대가 지급

- 궁극적으로 식량, 전력 등 대가가 있어야 북한이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도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을 요구할 필요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대급부(인권, 자유 등)를 북한에 요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북한에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응할 것

□ 남북간 대화채널의 신뢰성 구축 문제

- 남북간 대화채널에 대해 북측이 신뢰할 수 있도록 회담의 단기적 목표보다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은 적대적 공존관계로 기본적으로 신뢰채널을 구축하기 곤란, 따라서 통일될 때까지는 적과의 협상이라는 인식하에 출발할 수밖에 없음.

□ 남북대화를 통한 이익 발생 여부

-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은 식량 등 유형적인 것이나, 북에서 남으로 온 것은 무형적인 것들임.
- 우리가 얻은 것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일반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 적십자회담의 향후 진로

- 이산가족 문제는 철저히 우리측의 수요이며, 북한으로서는 이해 관계가 없는 사항
-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당국간 회담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임.

4. 향후 회담운영시 고려사항

- 각종 합의서, 공동보도문은 언론을 통한 대국민 약속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 필요
- 북한의 회담운영에서 우리가 착안할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분야별 회담운영, 조정, 평가체계 제도화를 통해 회담운영 담당자의 전문성 심화 필요성
- 회담과 직접 관련 없는 타부처 참여 제한을 통해 불요불급한 인원 최소화

문서번호	회이3127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3. 30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2과)
과장	조원규
작성	김신윤

남북대화 비상임자문회의 결과보고

남북대화 비상임자문회의를 3.29 개최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최근 북-미관계 및 남북대화, 민간부문 대북협상에 대해 논의하였음.

참석자들은 현재의 남북대화 중단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음.

□ 최근 북-미관계 및 남북대화 추진방향

-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은 초기에는 남북대화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겠지만 한-미간 역할 분담을 통해 미국이 태도를 분명히 할 경우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임.

- 북-미관계 악화가 남북관계에 반비례로 작용한 과거 사례를 염두해 둘 필요 (김용환 위원장)

- 미국의 대북 강경대응 관련 한-미간 역할 분담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데, 이는 우리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키고 지나치게 강조하면 한-미간 공조의 틈이 발생함. (미: 전략무기·평화협정보장, 남: 재래식 무기·평화협정 등)

(김일무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우리로 하여금 미국을 설득토록 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는 바, 이를 위해 북측과 무리한 협상을 할 필요는 없음.
- 현재의 남북관계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한-미 갈등 최소화 및 공조체제 강화 필요 (정규섭 관동대 교수)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남북대화를 정상적으로 진전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함.
- 현대도 협상과정에서 과격할 정도로 불평하였으며 북측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김고중 현대아산 부사장)
- 남북간 장관급회담 등 여러 대화채널이 있는데 문화부 장관이 방북하여 협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화창구의 체계화, 협상의 저비용·고효율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제도화 모색 필요 (정규섭 관동대 교수)
- 김정일의 중국방문 이후 장쩌민 측근 쩡칭훙 방북(3.20), 아들 강면항 방북예정(5월) 등 북-중은 밀월관계에 들어갔으며,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시 북-미 관계와 함께 북-중관계도 고려해야 함.
- 쩡칭훙의 이번 방북 목적은 장쩌민 방북문제 협의와 북한의 개방에 맞추어 노동당 규약의 수정문제 등 조언 예상 (김고중 현대아산 부사장)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지지 확산

- 우리 내부의 갈등의 하나로 “북한의 위협은 상존하는데 북한만 살찌게 한다”는 여론도 있는 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산을 위해 군사적 긴장 완화의 가시적 조치가 필요함. (김일무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정부는 남북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론 주도층 설득과 대북정책에 대한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함.
 - 「6.15공동선언」 이후 내부적으로 친DJ=친통일=친북=민족우선과, 반DJ=반통일=친미=국가우선이라는 두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교수)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개발 협상과 정부지원

-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 및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가칭 「국제자유경제지대 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나 이의 지연으로 기본계약 등 사업시행의 후속 협상이 답보 상태임.
 - 토지공사는 북측에 육상통행, 저임금, 토지장기무상임차, 조세우대 등을 지대 기본법 제정에 반영토록 요청중
 - 정부도 북측이 경쟁력있는 「지대 기본법」 및 관련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당국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적 지원 필요

○ 공단사업 착수 이전에 육로개설이 안될 경우 물류비용 과다가 공단 조성원가 및 입주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작용되어 사업성이 없음.

-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착수 이전에 도로연결의 조기완공 타당성을 북측에 촉구하고, 간편한 남북 통관절차(CIQ)를 북측과 협의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 1단계 공단개발 추진시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투자비가 과도한 바, 진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단사업비 일부의 국고 지원(약 640억원)이 필요함.

(박덕수 한국토지공사 단지 본부장)

○ 북한 당국의 경제지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병행하여 우리 정부도 경제지대 개발을 지원하고 인원, 물자의 원활한 출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함.

- 또한 남북 사업자간 협의와는 별도로 당국간 협의를 통해 경제지대 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 필요

(김고중 현대아산 부사장)

○ 개성공단 조성시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류비용 및 인프라 비용이 다른 나라 진출에 비해 과다하여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한 인프라의 지원이 있어야 중소기업 진출 가능하고, 임금도 나진·선봉지역 수준(160원)이 되어야 경쟁력 확보

(오광성 C&M커뮤니케이션 사장)

□ 기 타

- 최근 한국통신은 북측에 통신장비를 제공하고 기술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 유휴 통신설비 지원을 위해 북측과 협의를 계속할 계획임.
- 정부도 통신합의서 체결을 통해 공중통신이 원활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경수로, 금강산 통신망은 일본을 경유함으로 남북통신이 아닌 남남통신)
(전민주 한국통신 남북협력국장)
- 북한이 최근 전국연합, 전농 등 민간단체 접촉을 북경에서 금강산으로 바꾸는 등 금강산 접촉을 선호한 이유는 제3국 접촉이 북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북한은 북경접촉시 체류경비, 해외출장 허가(약 15일 소요), 보위부 요원파견 등 문제 상존(김고중 현대아산 부사장)

문서번호	남기3126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4. 27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기획과)
과 장	김 용 희
작 성	김 창 현(5급)

남북대화 타개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 결과보고

남북대화 타개방안 마련을 위해 4.26(목) 11:00-13:30 삼성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동용승·신지호)를 초청하여 협의를 가졌는 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회담중단 사유

-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입장 및 북한의 부정적인 대남 인식에서 비롯
 - 부시행정부 출범이래 대북 강경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미관계를 의식하여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관찰 필요성
 - * '93년도 클린턴 행정부 출범시, 핵문제로 야기된 미국의 대북 강경분위기에 우리정부가 편승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급랭했던 사례

0 북측 내부의 대남정책 결정과정에서 군부세력의 입지 강화

- 금강산관광사업이 어렵게 되고 전력지원 확보도 불투명하게 되자 최근 우리내부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북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 남북대화 타개방안

0 북측이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수 있는 명분 제공이 중요

- 북측이 대화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 이를 반복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임.

0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형성이 중요

- 미국의 강경한 대북입장, 우리 내부의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신뢰를 북측에 심어줄 필요가 있음.

3. 향후 전망

0 금번 우리측의 대북 비료지원은 북측이 남북대화에 나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북측이 남북대화에 호응하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정치·군사·경제 등 여러 분야의 회담에 응하기보다는
 - 장관급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등 제한적으로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전망

- 김정일 답방문제는 대미·대남·대내요소 등을 점진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임.
 - 미국 파월 국무장관의 5월 방한, 북·러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 처리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

-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비료를 맞바꾼다”는 비판적 여론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강구할 필요

〈 끝 〉

문서번호	회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5. 4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회담1과)
과 장	손 종 수
작 성	행정사무관 김 종 우

남북대화 타개방안 관련 세미나 결과 보고

남북대화 타개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류길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5.3 목 15:00~17:00)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북한태도 진단

가. 대미관계

- 부시행정부 인사들의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발언, 테러 지원국 지정 등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인식이 고조
 - 클린턴 행정부 말기 북한이 상당한 양보를 하며 미사일 협상을 진행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전개는 북한에 커다란 충격
- 그러나 대미비난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에는 대화로 응 하겠다”는 등 북미관계 개선의지를 표명
 - * 부시행정부의 패권주의적 대북강경책이 지속될 경우, 과거와 유사한 북-중-러간 북방협력체제 형성 노력 예상

나. 대남관계

- 우리 정부의 전력협력 및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따른 불만 고조
 - 우리측에 대한 불만은 체제긴장과 중첩되어 김용순 등 대남 협상파의 입지를 약화
- 그러나 북한도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를 무한정 지속하기는 곤란
 - 우리측이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면 5월말경에는 대화재개의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

2. 남북대화 타개 방안

가. 기본방향

- 북한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경제협력을 모색, 6·15이후 구축된 남북간 신뢰를 회복·강화
 - 경제지원의 형식을 취한 해법을 강구하되
 - 국내여론에 추종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여론을 선도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노력 필요
- 국제적으로 북한의 위협인식을 감소시키는 노력 경주
 - MD와 북한문제를 분리하여 접근, 미국측에 북미협상 재개를 촉구
 - * 북미협상 재개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
 -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한 균형외교를 지속하도록 외교적 협력을 강화

나. 남북대화 유도 방안

〈 남북대화 유도 카드 〉

- 우선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조속히 정립, 비공개 접촉을 통해 남북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유도
 - 북한의 주요 관심사항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시킴으로써 북한내 대남 협상파의 운신의 폭과 입지를 강화시켜 줄 필요
 - * 남북대화 재개시 추가 비료지원(10만톤 정도)도 고려

〈 금강산 문제 해결 방안 〉

-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주체 구성
 - 현대측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 3개사 정도의 컨소시엄을 구성
- 정부의 개입 방식
 - 한국관광공사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상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에 대한 지불액의 절반(600만\$) 정도를 식량, 비료 등 현물로 지급

〈 대북협상시 관철사항 〉

- 관광대가의 인하와 대가의 50%는 현물로 지급
- 육로관광, 관광지역 확대, 관광특구 지정 등 관광사업의 광역화
- ※ 남북 비공개 접촉시, 전력협력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도 함께 전달

〈언론대책 : 비공개〉

□

남북회담대표단의 상호방문 관련절차

2001.7.4(수)

회 담 2 과

1. 관련 법령

교류협력법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북한방문신청서 및 신원진술서, 신변안전보장 관련 서류 등을 통일부에 제출 ○ 통일부장관이 관련기관장과 협의 ○ 방문증명서 발급 ○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단 중 1인이 북한방문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자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첨부 ○ 협의절차 생략 ○ 좌동 ○ 좌동

※ 남북회담대표단의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를 고시로 제정(2000.8.25)하였으나, 북한 대표단의 남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는 미비

2. 우리 대표단의 북한 방문 절차

중국 경유시	판문점 경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북자 인적사항 대북 통보 ○ 주중국 북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방북 ○ 방북시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CIQ 절차를 거쳐 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관례에 따름 - 사진 및 인적사항을 방북전 북측에 통보 - 방북시 북측 연락관이 상기사항을 방북자와 대조 ※ CIQ 미실시

3. 북측 대표단의 중국경유 남한방문 절차

교류협력법	현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남한방문신청서, 신원진술서, 사진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교류협력국)에게 승인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측 절차 무시 - 방한 직전 간단한 인적사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장관이 관련기관장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측 절차 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측 절차 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장소에서 출입국심사

※ 판문점 경유 방한의 경우는 남북간 관례에 따르고 있음

4. 북측 대표단의 남한방문 절차 간소화(안)

- 북측 대표단의 남한방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남한 방문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협력법 관련 규정의 사문화 방지
 - 대리인(회담사무국장 등)이 북측 대표단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소속)만을 가지고 남한방문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절차 생략
- 다만, 이 경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 통일부 교류협력국도 관할영역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

※ 법무부는 이신가족 상봉시 출입국관리를 간소화한데 대하여 공문으로 항의한 바 있음

북한의 협상전략과 제2차 정상회담 추진방향

2001.7.18
남북회담사무국

이 보고서는 고유환교수(동국대, 남북회담분과 자문위원)에게 위촉한 과제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1.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북한의 협상전략

- 북한의 협상전략은 지난해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하여 상당히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북한의 협상전략의 특징은
 - ① 선 미국과의 대화, 후 남한과의 대화 ② 선 민간급 대화, 후 당국간 대화 ③ 회담수준의 단계화(차관급→장관급→총리급 순으로 회담에 호응) 등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협상태도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강조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는 반드시 이행한다는 입장
 - ② 실용주의 및 기능주의적 대화자세 : 과거 정치·군사 문제 우선 해결입장에서 벗어나, 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히 알리고 경제적 지원을 호소
 - ③ 외세배격과 민족공조 강조 : 북-미관계에 주력하면서 남한당국을 배제한 과거와는 달리 '민족공조'를 크게 강조

- ④ 남한당국에 대한 비난 자제 : 미국 부시행정부에 대한 비난은 강화하면서도 우리 당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 이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남한 밖에 없다는 인식에 토대
- ⑤ 신의와 실천 강조 :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베를린선언 이행에 대한 우리측 압박용으로 활용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가. 시기 문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시기와 관련
 - 북한의 내부사정 및 남한내의 분위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 다만, 우리측이 전력 등 경제적 지원을 보장한다면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 북측이 국가보안법 및 주적개념 철폐 등을 전제조건화 할 경우에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

나. 북한의 예상전략

- 북한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1,2항을 중심으로 통일문제를 공세적으로 전개, 통일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업적을 부각시켜보려는데 주력
 - 남북간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외세공조 포기과 민족공조(민족대단결)를 주장

- 북한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본·기술, 전력 등 에너지, 식량 등을 요청
- 북-미 평화협정 체결의 전단계로서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

다. 우리측의 회담진략

- 예상되는 의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정립할 필요
 - 통일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남북 당국간에는 당분간 동 문제 협의를 지양하고, 우선은 내부적으로 학자 및 관계 전문가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 조성용으로 적극 활용
 - 북-미관계개선에 있어 김대중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다음 사항에 합의하는 것을 고려
 - ①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 ②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③ 이산가족문제의 전향적 해결 ④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문제 ⑤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진출 문제 등

라. 유의 사항

- 우리 사회의 일부 보수계층이 김정일위원장의 담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사전 정지작업에 역점을 둘 필요 〈끝〉

문서번호	회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7. 20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회담1과)
과 장	서 호
작 성	김 창 현(5급)

소강상태의 남북대화 타개방안 모색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대화의 타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자문대상: 이종석(세종연구소), 서주석(국방연구원), 김영수(서강대)

< 북한의 대화중단 지속 배경 >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은 6월말까지는 남북대화를 지체시켰던 근본적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남북대화 재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및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 그러나 6월 말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로 말미암아 북한은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려던 입장을 재검토하게 되었음.

- 남북관계 요인으로 △탈북자 장길수 가족 서울도착 △황장엽 방미문제 △야권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김정일 답방문제 연계 시비 등
- 대미 요인으로 △미·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태도 △MD추진 명분을 위한 「북한 위협론」 제기 등

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은 현 국면을 미·북간 「기세싸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강경기조를 꺾지 않으면 향후 미·북협상이나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희망하는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북한은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미·북간 「기세싸움」에서 미국이 이를 북한의 양보 혹은 후퇴 가능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현대-아태간 합의서에 따른 당국간 회담이 지지부진한 것도 동 회담이 단순한 경협회담이 아니라 경협분야 회담→ 유엔사-북한간 회담→ 군사실무회담→ 장관급회담으로 이어지는 전반적 남북관계 진전을 의미하기 때문임.

김영수 서강대 교수

-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진행된 남북관계를 일정 기간 소강상태에 두면서 대내외 환경을 점점하는 「숨고르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남한 길들이기」 작업을 지속, 북한에 유리한 국면조성에 주력
 - * 7.18 KCNA의 제주해협 무해통항 불허 비난논평도 비슷한 맥락.

〈미·북협상 전망〉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미·북협상은 북한보다는 미국의 완고한 입장으로 긍정적 전망이 어려운 상황임.

- 미국이 제시한 협상의제, MD추진의 명분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위협론」 등이 부정적 요소

* 북한 백남준이 ARF에 불참한 것도 미국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미·북회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미·북 양측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고, 당분간 입장 변화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북협상의 전망은 어두운 편임.

- 미·북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쌍방 입장을 탐색하는 실무 협상 수준에 그칠 것임.

김영수 서강대 교수

○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전력문제에 대해 미국이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한 미·북관계의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남북대화 타개방안 >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 때문이라도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것임.
 - * 7.20 조홍규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방문시 대북접촉이 향후 남북 대화 전망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북한을 남북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식량) 카드를 구사할 필요가 있음.
 - * 이회창 총재도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

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적으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 호응해 나올 수 있는 「당근」 제공이 필요하며, 그것은 「대규모 전력지원」 밖에 없음.
- 단기적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위해서는 육로개설의 경제적 이점 등 추가 정보를 공개하면서 북한을 회유하는 작업이 필요함.

김영수 서강대 교수

- 2002년도 남북 양측의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이 지금의 남북대화 소강상태를 장기간 지속시키지는 않을 것임.
 - * 남한의 대선 정국, 최근 가뭄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사정 등

0 소강국면의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적극 실현할 필요가 있음.

- 대북 전력지원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
 - *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전력 지원을 motto로 한 국민캠페인 추진 (한등끄기 운동), 재원마련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력상품권」 발행제도 검토 등
-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논리와 이론체계를 개발
 - * 이른바 「남북관계 주기론」으로 남북관계를 설명, 단기적으로는 진전과 경색을 반복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국민적 판단기준·논리를 제공할 필요 → 남북관계를 정부 또는 대통령의 통치능력과 직결시키는 부담으로부터 탈피
- 향후 남북대화 재개시 「경의선 복구사업」에 주력할 필요
 - * 경의선 복구는 남북대화의 관건적 사업이며 김정일 담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력한 카드(김정일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이동수단)

< 끝 >

정치 · 군사 분야

북측 「2001년 통일대회」 개최 및 호소문 채택

2001. 1. 11
남북회담사무국

1. 상 황

- 북측은 1.10 오후 정부·정당·단체 대표들의 참석하에 기존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형태인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를 개최
 - 금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 6.15~8.15간을 「민족통일운동 촉진 기간」으로 설정하여
 - 금년 광복절을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장식할 것을 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상임위 부위원장 보고 형식)
- 회의종료후 상기 내용의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 * 김영남, 김용순, 최태복, 양형섭, 김영대, 유미영 등 당·정·사회·단체인사, 비전향장기수, 해외동포 등 참석

2. 주요특징

- ① 북측의 이번 제의는 기존의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의와 유사하나 형식과 내용면에서 종전과 다른 양상

○ 형식면에서

-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다무적」 또는 「쌍무적」 회담 형식 대신 “공동운동기간 설정”을 제의
- 남한 및 해외인사에 대한 「편지」를 채택하지 않고 「호소문」으로 채택

○ 내용면에서

- 북측 통일노선의 일방적 주장이나 대남비방 자제
- 6·15 남북공동선언 조항별로 기합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열거, 이행을 강조
 - * 북측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지지와 이행을 결의하는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8·15에 이어 두번째

②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자주적 통일을 언급하면서 남북당국과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

-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은 당국·정치인 사이의 오해와 불신이지 인민들 사이에는 없다고 주장
- 당국과 정치인들이 자주의식을 투철히 가져 외세와의 공조가 아닌 동족과의 공조에 확고한 입장을 가질 것을 요구
 - 주적론과 보안법에 매달리지 말고 남북관계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임을 강조

③ 6·15 남북공동선언의 통일방안 합의 정신에서의 통일지향을 명확화

- 북한 주민을 의식, 연방제 통일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언급하며 「연방 연합 방식이야 말로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밝힘으로써
 - 금년도 신년사에서 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통일방안 합의 정신에 훨씬 접근한 태도 시현

④ 인도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측 잔류 비전향장기수의 선차적 송환을 강조

- 방문단교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 아직 우리측에 남아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마저 송환하는 것은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인도주의 문제임을 강조.

⑤ 여러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기 합의한 경제협력의 실천만을 언급

- 사회문화분야에서 기합의·논의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무언급

- 경제교류협력분야도 기합의·논의되고 있는 전기협력, 철도-도로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북측 동해어장 우리측 제공 실천만 거론

⑥ 남북간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언급

- 외세와의 군사적 공조가 아닌 동족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불거론

3. 분석·평가

- 금번 북측 통일대회에서의 보고내용은 금년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북측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 북측이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한 것은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미·북관계 보다는 우리측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도
- 북측이 각계각층이 서로 연대·단합하여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거족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당국과 정치인들 사이의 오해와 불신 제거를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통일전선을 전개할 가능성
 - 친북단체만이 아닌 우리측 여러 민간단체와 분야별 접촉을 확대(하층 통일전선의 확대)하는 가운데

- 남북국회회담 개최 등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북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
(상층 통일전선의 강화)
- 특히 북측이 정치인들의 화해·단합을 강조한 것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북지원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
 - * 북측은 “여야당 사이의 정쟁이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언급
- 북측은 남북공동선언을 지침으로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들을 쌍방이 합의한 시간표대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천명
 - 금년도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 북측은 금년도 남북대화에서 주적론과 보안법 문제를 우리측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 요컨대, 북측은 금년도에는 미국의 새정권 출범과 김정일 위원장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 각계각층의 활발한 남북교류·협력·대화를 통해 남북화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북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선회하는 것을 견제해 보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평가

4. 대처방향

-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균형적 추진입장을 도모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처
- ① 통일방안 논의에 대비한 우리측 입장을 정립
 - 「연합제안」과 「낮은단계 연방제」의 공통점 토대위에서 우리측이 주도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강구할 필요
- ② 국회회담,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 제의에 대한 대비책 강구
 - 우리측이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보아가면서 국회회담을 선제외 하는 방안 고려
 - * 여·야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
 - 북측이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의해 올 경우, 「민화협」을 내세워 대응
- ③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 잔류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책 강구
 -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제조건화 차단
- ④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 설정과 관련
 - 과거 범민족대회와 같은 「통일투쟁 선전장」이 아닌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남북간 화해·협력의 장」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
 - 북측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접촉과 대화를 전개할 가능성에 대비, 「민화협」을 중심으로 우리내부 통일운동 세력을 결집시켜 대처

「6·15 공동선언 이행」 가이드 라인

구 분	공동선언 내용	「2001년 통일대회」 보고문
제1항 통일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자주와 대단결 원칙을 철저히 구현 - 외세의존 및 군사적 공조가 아닌 동족간의 공조입장 견지 - 주적론 철회, 보안법 철폐 - 각계각층 차이를 초월한 연대·단합
제2항 통일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면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 - 연방 연합방식은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
제3항 인도적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즈음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있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선차적인 절박한 인도주의 문제 ○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서신거래, 면회소설치 문제 해결에 성의 ○ 제3차 적십자회담 개최
제4항 교류·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협력, 철도-도로연결, 임진강 수방사업 등 당면한 경제협력 문제 실천 - 동해어장 제공문제 실현 기대
제5항 당국간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야, 진보·보수 구분 없이 접촉과 대화 전개

문서번호	회인31200-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01 3. 28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회담1과)		
과 장	김	응	희
작 성	여	상	기

북방한계선 이북 수역 해상구조 관련 대북연락 체계 수립 방안(안)

북방한계선 이북 수역에서 해상조난 사고 발생시 긴급 대북연락 체계 수립 관련입니다.

1. 문제제기

- 2001.3.28 캄보디아 상선 1척이 동해상 북방한계선 이북 수역에서 선체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긴급구호(SOS)를 타전(11:15)
-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SOS를 받은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는 등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긴급상황에 따르는 대북연락체계에 문제점 노출
 - 해양경찰청 실무자가 전화로 우리국에 적십자 직통전화를 통해 동상선에 대한 북한의 구조를 요청한다는 전통문 발송을 의뢰(13:00경)해왔으나, 전통문안을 미검부
- * 동문제 처리 관련 우리 부내 소관 실국 문제도 모호

2. 조난선박 구조과정

<국방부측 설명>

- 북측의 묵인하에 우리측 해경 경비정 1척이 사고해역으로 진입, 구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상선은 침몰
 - 국방부는 우리측 선박의 북방한계선 이북 진입은 분단 이후 최초로써, 이는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

※ 언론은 국방부측 설명을 보도

<해경측 설명>

- 동 상선 선원들은 SOS 타전 이후 구조를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구명정에 옮겨타 조류를 따라 남측으로 표류,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우리측 해경 경비정에 의해 구조
 - 포기했던 상선도 3. 28 밤 조류를 타고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떠내려왔음.

3. 북방한계선 해양조난 구조관련 대북연락 방법

- ① 우리측이 북방한계선 이북 수역으로 진입하여 직접 구조활동을 할 경우 군정위 라인을 통해 대북연락
 - 이 경우 △ 북측이 북방한계선 이북 진입 동의 △우리측 선박과 구조인원에 대한 북측의 안전보장 요구 필요

- ② 조난사실을 북측에 알리고 북측이 구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적십자 라인을 통해 대북연락
 - 이 경우 해경 등 관계기관은 대북전통문 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일부에 요청

문서번호	회인31200-66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4. 19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회담1과)
과 장	김 응 희
작 성 자	5급 여 상 기

평화체제 구축 관련 과제위촉 결과보고

회담대책 수립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관련 전문가 과제위촉(기간: 3.1~4.15)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남북평화합의서 채택을 위한 협상전략(고유환 동국대 교수)

-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복원선언을 통해 불가침 합의 재확인 절차가 필요
 - 평화합의서에는 과거사에 대한 유감 표명, 기본합의서 재확인, 4자회담 재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서울-평양간 연락 사무소 설치 등으로 구성

2. 남북평화합의서 국제적 지지확보 전략(박건영 카톨릭대 교수)

- 남북주도의 '평화선언'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미국측을 고려,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부속합의서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평화선언 채택을 위한 국제적 지지확보 노력 경주
 - 한미간 여론주도층간 민간정책협의회 구성, 햇볕정책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EU활용 및 중국의 극비리 협조 당부 노력 필요

3. 해외사례로 본 남북평화체제 구축전략(이규열 국방연구원 박사)

- 동서독기본조약, 중동평화협정 및 월남평화조약 사례 정리

붙임: 전문가 위촉과제 3편

문서번호	회일3120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0. 4. 25
공개여부	비 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과)
과 장	손 중 수
작 성	사무관 김 중 우

민주당 의원단 유라시아 철도를 통한 방북 관련 보고

민주당에서 이해찬 남북특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12명 내외의 의원 및 관계자(기자 포함)들이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여 방북,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으로 귀환하는 계획을 다음과 같이 파악, 보고드립니다.

1. 계획내용

- 기 간 : 5.17(목)~6. 4(월) (방북기간 : 2박 3일)
- 여 정 : 러시아(모스크바, 이르쿠츠크)→몽골→중국(북경)→북한(평양, 개성)→판문점
- 참가자 : 12명 내외
 - 의원(5) : 이해찬 남북특위위원장, 정대철 최고위원, 김성호 의원, 이미경 의원, 박병석 의원
 - * 이낙연 의원은 불참 예정(언론에서는 참가하는 것으로 보도)
 - 관계자(7) : 전문위원, 전문가, 기자(카메라, 펜, 사진, 연합통신), 통역

2. 추진현황

- 상기 계획은 구상단계로서 “일단 북측에 공개 제의 차원”에서 언론에 보도(민주당 김일만 전문위원, 동 계획 추진 실무자)
 - 여행일정 미확정 단계(철도연결 시간 등을 감안 일정 축소도 검토)
 - 방북과 관련 북측과 사전협의를 없으며, 이를 위해 우리부에 구두로 협조를 요청(방북 및 판문점 통과 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선 연결, 방북시 면담인사, 방문지 등에 대한 조언 등)

3. 고려사항

- 상기 계획이 성사되면, 이를 계기로 남북정치인 교류 활성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일정을 늦추더라도 북측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필요
 - 특히, 언론사 사장단 방북('00.8.5~12)시 김정일 위원장의 판문점 관련 언급에 비추어 볼 때, 판문점 통과는 성사가 불투명
 - * 최근 4.7~4.10간 평양을 방문한 스위스 데니켄 외무차관 일행은 판문점 경유 귀국을 희망하였으나, 북측이 거부

〈 태외발표 : 비공개 〉

문서번호	회인31200-85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01. 5. 17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회담1과)
과장	손종수
작성	이상기

미·중 관계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미·중 관계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신상진 박사(통일연구원) 과제 위촉(기간: 5.11~17)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 드립니다.

□ 미·중 관계 변화: 전략적 동반관계 → 전략적 경쟁관계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가 클린턴 시기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경쟁관계'로 변화

- 중국은 미국 주도하의 단극질서 구축에 반대하여 국제질서의 다극화 주창

○ 특히 양국은 정치·군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갈등 심화

- △ 인권문제 대립 △ 무기 수출문제 △ 대만문제 △ MD 구축문제
△ 군용기 충돌사건 등에서 양국간 첨예한 갈등 표출

○ 한편 경제·통상관계는 양국이 상호 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정

- 미국은 중국의 2대 교역국(중국 대외무역의 30% 점유)이며 중국은 미국의 4대 교역국(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200만 달러)

○ 향후 미중관계에서 경제통상 관계는 확대 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인권문제, 대만문제 및 MD문제 등 정치·군사적 갈등 양상 지속 전망

□ 미·중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 미·중 관계가 경색될수록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양국간 영향력 확대 경쟁이 심화
 - 미국과 중국간 안보갈등이 심화될수록 중·러·북간 안보적 결속과 한·미·일간 안보연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미·북 관계 개선이 지연됨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의 진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MD체제 구축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반면, 이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반감은 증폭
 - 결국 한반도에서 주변 4국과 남북간 군사안보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어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증진에 소극적으로 작용
- 향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 △ 한·미동맹관계 유지 △ 중·러와 제한적 안보협력 추진 △ 동맹관계와 민족문제(남북관계)간 조화 △ 한반도 문제를 미·중의 갈등 구조로부터 분리 △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추진 등이 필요 (국)

문서번호	회일3120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1. 5. 28
공개여부	비 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과)
과 장	손 종 수
작 성	사무관 김 종 우

국내여론 및 정치구조와 남북협상 전략

본 보고서는 양면게임(Two-Level Game) 이론의 국제적 전문가인 모종린 교수(연세대)에게 위촉한 과제(국민여론과 상대편 입장이 성공적으로 조화/실패한 주요 협상사례와 남북회담에서의 교훈)중 일부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1. 양면게임(Two-Level Game) 이론

- 양면게임 이론은 하바드대학 퍼트남(Robert D. Putnam)교수의 논문(외교와 국내정치 : 양면게임의 논리)에서 처음으로 제시(1988)된 이후, 국가간 안보, 경제분야 협상의 유용한 분석틀로 활용

〈 기본 논리 〉

- 양면게임 이론은 「국가간 협상시 협상대표단은 상대국 대표단과 협상하는 테이블(Level I)과 자국의 정당, 이익집단 등과 협상하는 테이블(Level II)에 동시에 앉아 협상을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
 - 국가간 협상을 협상대표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상대국 대표를 상대로 협상할 뿐만 아니라, 국내 집단 및 여론과도 끊임없이 절충하는 과정으로 파악

- 따라서 국가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상 결과를 국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win-set)가 중요
 - 「윈셋(win-set)」은 양면게임 이론의 핵심개념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국내적 기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
- 왜냐하면 국가간 협상에서의 합의는 각국의 윈셋이 겹치는 합의 가능 영역(zone of agreement)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 따라서 윈셋이 클수록 합의가능 영역이 넓어져 협상타결의 가능성이 상승
 - 한편, 국내집단이 자국 협상대표에게 더 많은 제약을 부여한 측이 국제협상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양면게임 이론의 결론
 - * 국내제약이 큰 협상자는 그만큼 국제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상대방의 양보를 얻기가 쉬움.

< 양면게임에서의 국제협상전략 >

- 국가간 협상에서 한 국가의 협상력은 국내 정치구조, 즉 협상대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제약의 크기에 의해 결정
 - 협상담당자는 이러한 제도적 제약을 조작함으로써 협상력 제고 가능
- 퍼트남은 윈셋의 결정요인으로 ① 국내 여러집단의 이해 및 제휴 관계 ② 국내제도 ③ 국제협상에 임하는 협상 담당자의 전략 등을 제시

- 정책사안이 국내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인 경우, 민주화 등으로 한 국가의 정치화 정도가 클수록 원셋의 크기는 축소
- 정책결정자가 국내 이익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경우 원셋의 크기가 축소
- 요컨대, 양면게임 상황에서 한 국가의 협상력은 자국 원셋과 상대국 원셋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자국의 원셋을 확대·축소하거나 상대국의 원셋을 확대하는 등 원셋 크기를 변화시키는 협상전략에 따라 협상력 향상

① 자국에 대한 전략

○ 고삐늦추기(cutting slack)

- 국내집단에 대한 이면보상(side-payment)이나 문제의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여 원셋의 크기를 확대
- 국가지도자들이 국내집단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압력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국의 원셋을 확대하여 협상 담당자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전략

○ 발목잡히기(tying-hands)

- 국내강경파에게 공개적인 약속을 하거나, 국내여론의 흐름을 강경한 방향으로 유도, 원셋을 축소
- * 이 전략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나 협상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거의 행해지지 않음.

② 상대국에 대한 전략

- 표적을 노린 사안의 연계(targeting issue-linkage)
 - 상대방 국내의 집단중 영향력의 균형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안과 연계, 원셋의 확대를 시도
- 메아리(reverberation)
 - 상대국 집단에 직접 호소하여 협상사안에 대한 기대나 사안의 이미지를 변화
- 정부수반간 담합
 - 각국 정치인들이 각자의 정치적 자산을 상호교환, 상대측 정치인의 상대국내 지위를 강화, 원셋을 확대함으로써 합의를 용이하게 추진

③ 초국가적 로비 및 제휴

- 국내의 집단들이 상대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국 집단과의 제휴를 통해 상대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

2. 남북회담 추진전략

< 기본가정 >

- 우리정부, 우리측 보수세력, 북측 당국으로 상정되는 남북협상의 주체는 남북협상의 이슈인 안보(평화)와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가. 시나리오 1

- 우리측 보수파의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로 우리 국내 원셋이 지나치게 작아 남북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

< 협상전략 >

- 지나치게 축소된 국내 원셋을 확대하여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

① 국내 보수세력 설득 전략

- 정부가 추진하는 수준의 경협을 선호하도록 안보에 대한 국내 보수세력의 우려는 존중하되 경제협력에 대한 사고를 변화
 - 경협을 통해 보수세력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신뢰확보가 핵심

② 「고삐 늦추기」 전략

- 협상결과에 따른 이득을 재분배하는 이면보상(side-payment)을 보수세력에 제공

- 우리측의 '군사력 강화'라는 이면보상으로 안보에 대한 국내 보수 세력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원색을 확대

③ 국내 의사결정 구조 변화

- 정책결정 과정에 정부에 우호적인 세력의 참여를 유도하여 강경 보수파를 견제하여 국내 원색을 확대

나. 시나리오 2

- 남북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우리측의 국내제약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

< 협상전략 >

- 우리 정부가 보수세력의 실질적인 제약을 받아 합의 가능한 원색의 크기가 축소되었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하여 원색의 신빙성을 증명

① 「발목 잡히기」의 공식화

- 국내보수파가 언론과 야당을 통해 행사하는 준거부권을 공식화 함으로써 정부의 국내적 제약을 입증
 - 정부의 자율성은 저해되나 비공식적인 제약을 공식화함으로써 북측을 설득

② 「정치쟁점화」의 확대

- 협상사안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더욱 강경한 쪽으로 이끌어 정치쟁점화 범위를 확대
 - 포용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일방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동시에 강조하여 국내제약을 더욱 가시화

③ 국내적 합의 존중에 대한 평판 확립

- 북측이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우리 정부의 국내적 제약을 오인하는 경우
 - 우리 정부가 국내여론을 존중한다는 평판을 확립함으로써 국내 제약의 존재를 신뢰하게 만듦.
 -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북측의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만 평판 확립이 가능

다. 시나리오 3

- 북측의 협상주체도 우리측과 같이 제약을 받고 있어 남북협상이 불가능한 상황
 - 북측의 개혁과는 경험의 확대를 원하나 군부가 이를 반대하여 북측의 협상주체가 군사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 협상전략 >

- 우리측의 강경파와 북측의 군부가 타협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양측 강경파의 윈셋을 동시에 확대

① 경협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 경협의 확대가 남북한 강경파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논리 개발
 - 경협의 확대가 양측 군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홍보

② 강경파 영향력 축소 시도

- 정책결정 과정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양측의 윈셋을 확대
 - 외부군사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외부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증대시켜 남북한의 군사안보환경을 안정시킴.

□

< 대외발표 : 비공개 >

문서번호	회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6. 7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답사무국(회담1과)
과 장	손 종 수
작 성	여 상 기

북측상선 영해통과 관련 대응방안

북측 상선의 우리 영해 무단 통과 및 북방한계선 진입관련 전문가
과제 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 드립니다.

1. 과제위촉 현황

- 가. 위촉기간: 2001. 6.4~6.5(1일)
- 나. 위촉대상: 김명기(명지대), 김영구(해양대), 서주석(KIDA),
이장희(외대), 이종석(세종연구소)

2. 과제내용(요지)

가. 북측 의도

-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북측 선박이 의도적으로 우리측 영해를 통과한 의도에 대해
 - ① 경제적 항로 개척 ② 6·15 1주년에 즈음 남측의 화해의지 시험 ③ 정전체제 및 북방한계선 무실화 기도 ④ 미-북, 남-북 관계에서 북측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구도 모색 등으로 분석

* 항로단축의 이점으로 약600km(27시간) 추정

나. 향후 북측 예상태도

- 북측선박이 정전협정 이후 근 50년만에 처음으로 '무해통항'을 주장하면서 우리측 영해를 통과함으로써 문제 부각에는 성공
- 다만, 북측이 우리측 영해의 무단 통과 행위를 지속할 경우 남북및 미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려하여 일단 중단 후 관망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

다. 대처방안

- 일단 영해 및 북방한계선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되, 이 문제를 북측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북방한계선에 대한 정부입장 마련, 서해 소령도까지 영해로 규정된 기존의 영해 확정 문제 재검토, 제주해협 등 영해선박 감시 체계 강화 등이 필요
- 남북협상·회담시 무해통항 문제와 북방한계선 문제를 분리하되, 무해통항 문제를 NLL 문제 해결에 활용
 - 제주해협 통과문제는 NLL과 달리 국제 해양법적 문제로 우리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
 - 정전협정에 근거가 없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협의하기로 한 NLL 문제해결은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완충·공동어로 수역화'로 해결함이 바람직

라. 국내여론 대책

- 대부분의 보수적 여론은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영해침범으로, 잠정 경계선인 북방한계선 무단 통과는 대남도발로 인식
 - 일부 전문가는 평시에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을 기술적으로 '전시상태'에 있는 북측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 보수적 여론에 따라 대처할 경우 남북관계 악화 및 정부의 대북정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큼.
 - 따라서 유엔 해양법상 연안국이 타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되
 - 북측이 우리측에게 무해통항을 요청하도록 차분하게 유도하고, 영해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와 국제적 이용 문제 및 북방한계선의 성격 등에 대한 사실적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 <끝>

문서번호	회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6. 23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	과장	부장	국장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북회담 추진전략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북회담 추진전략」에 관한 전문가(백학순 : 세종연구소, 박영호 : 통일연구원) 과제위촉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드립니다.

1.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 '포괄적 접근'을 통해 대북문제를 해결하되 철저한 검증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선 북한의 긍정적인 행위확인, 후 보상' 입장 견지
- 제네바 합의의 준수를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제네바합의 이행 개선을 추진
 - 경수로 1기의 화력발전소 대체문제도 배제하지 않고 대안으로 고려
- 북한 미사일 개발, 생산, 배치, 수출 등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모든 합의는 철저히 검증
 - 미사일 문제 해결의 반대급부를 한·일에 전가할 가능성
-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비무장지대 전진배치는 군사적 위협이며 재래식 군사력의 감소를 북한 변화의 기준으로 간주

보고 : 장·차관

2. 북측 예상태도 및 향후 북미관계 전개 방향

가. 북측의 예상태도

-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화재개에 응하여 대화 및 협상을 재개할 것이나, 미측의 협상의제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
 - 핵 및 경수로 문제와 관련 경수로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을 주장
 - 미사일 문제는 클린턴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양보한 내용을 토대로 협상
 -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철수문제 제기

나. 향후 북·미관계 전망

-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협상의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느것 하나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북·미 협상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북·미 양측의 상대방에 대한 포괄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정치·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체제 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며,
 - 미국은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위협이 제거된 기반위에서 장차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비한 동아시아 전략속에서 대북정책 구상·이행

3. 남북회담 추진전략

가. 기본 방향

- 일관되고 지속적인 화해·협력 정책방향에서 남북회담을 추진
 - 북한이 남북회담 자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주의
-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신뢰 제고
 - 현재의 남북관계 소강상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우리 정부의 경제지원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바, 북한의 불만을 완화시키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북·미관계에 종속될 우려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의 병행 추진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승효과를 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고 중재

나. 주요 분야별 추진구도 및 추진전략

<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문제 >

-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불가침’ 관련 조항을 재확인

-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정리화 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실질적 재가동 실현
-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협상지속을 비공식적으로 종용
- 북한의 주한미군 문제 제기에 대비,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포함, 주한미군 주둔 지속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남북회담시 제시

< 전력협력 등 경험문제 >

- 남북경제공동체건설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 자원동원 가능성, 국내 여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북사업 시행
 - 향후 수년동안의 대북 SOC 투자는 정부기금에 의한 공공투자 방식 위주로 될 것인 바, 국민적 합의, 정치권 합의, 북한측의 상응하는 협조가 필요
- 남북회담 재개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식량지원 용의 표명
 - 북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이나 동해안 지역에서의 어업협력을 통한 대가지불을 대안으로 고려
- 남북경제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통신·통상·통행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추진
-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은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틀에서 포괄적으로 협상

< 이산가족문제 및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

- 면회소 설치 장소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다른 사안과 연계하여 금강산 면회소 설치 수용
 -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및 증회, 면회소를 통한 생사확인·우편물 교환·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의 통합 관리
- 특수 이산가족(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과거 동서독이 선택하였던 정치범 석방거래방식 적용을 적극 검토
- 본인이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의 추가 복송 및 그들 가족의 주거 선택권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
- 사회문화교류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대북접촉면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율성 최대한 확대
 -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북한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비, 당국 차원의 접촉 병행 모색

4. 한·미 공조 및 국민적 지지 확보 방안

가. 한·미 공조 방안

- 한·미 양국의 관심사안의 우선 순위와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출발
 - 양국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관심사안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차이점을 감소

- 한·미간 대북의제 및 역할의 효율적 분담
 - 북과 핵 및 미사일 문제는 북·미 협상 위주로 하고, 재래식 군사력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불가침」에 관한 합의에 기초하여 우리측이 주도적 역할 담당
- 미행정부, 의회,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한·미 전문가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세미나, 워크숍 등을 적극 개최

나. 국민적 지지 확보 방안

- 전력협력, 금강산 사업 등 대북경제협력 및 식량 등 대북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 대북정책의 투명성 제고
 - 야당 총재와 여야 중진들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여 정치적 공감대 형성 노력 극대화
 - 언론이 정확한 사실보도와 공정한 논평 및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
 - 각계 원로,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에 대한 정책설명과 의견 수렴 활성화

□

< 대외발표 : 비공개 >

문서번호	회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7. 25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1과)
과장	서호
작성	사무관 김창현

「통노회」 강령 통일방안 조항 검토 보고

최근 우리측 노동자단체가 마련한 「통노회」 강령의 일부 조항이 북측의 연방제 방안과 유사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상 황

- 최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우리측 노동자단체들이 마련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이하 「통노회」)’ 강령 중 제2항 내용이 북측의 연방제 방안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통노회」 강령(초안) 제2항: “...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
- * 「통노회」 강령은 금년 8.15를 전후해 우리측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북측 직총 등으로 구성된 「통노회」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

2. 경 위

- 우리측 한국노총·민주노총과 북측 직총은 금년 3.10~11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
구성에 합의
- 남북 노동자단체들은 7.18~19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통노회」
제1차 대표자회의(금년 8.15를 전후로 서울 또는 평양)를 개최
하여 강령과 규약을 최종 확정키로 합의
- 우리측 노동자단체들은 7.24 북측과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거쳐 「통노회」 강령의 초안을 마련

3. 문제점

< 북측 연방제안 유사 시비 >

- 「통노회」 강령 2항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연방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
- *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 조국통일 방도의 대원칙”(’91년 신년사)
- 우리측 「연합제」는 2체제 2정부를 강조하면서 명시적으로
2국가를 주장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2개 주권국가를 상정
하고 있어 「통노회」 강령 2항은 논란의 여지를 제공

< 「통노회」 활동에 부적절 >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측 민간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행사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활동과 발언을 자제
 - *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2000.6.15, 금강산), 「6·15 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2000.7.18-19) 등
- 금번 우리측 노동자단체들이 초안 형태이기는 하나 연방제로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을 북측과 합의한 것은 노동자단체들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
 - 「통노회」를 만들어 남북노동자 단체간 안정적인 교류의 틀을 확보한다는 애초 취지를 벗어난 결과

< 남북교류·협력 위축 >

- 노동자단체들이 우리측 3단계 통일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연방제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내용을 수용, 합의한 것은 북측의 통일전선전술에 말려들 소지가 있음.
 - * 논의의 주체, 방식, 시기면에서 매우 적절치 않은 접근
- 특히 최근 국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또다른 「남남 갈등」 및 여론 분열 등을 유발, 남북관계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 행보에 제약 요인으로 될 가능성

4. 관련 조치

- 금번 「통노회」 강령은 8.15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우리측 노동자 단체들이 마련한 초안이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서
 -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 다만 남북대화가 소강상태에 있는 현 국면에서, 언론과 야당에 의해 동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노동자 단체들을 설득, 동 조항을 자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유도
(* 교류협력국에서 조치)

우리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단계 연방제」 비교

구 분	우리측 「연합제」	북측 「낮은단계의 연방제」
근 거	3단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2000.10.6)
기본원칙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정부성격	남과 북은 사실상의 주권국가	연방중앙정부와 남과 북의 자치정부
협상기구	남북평의회 (남과 북 국회의원 각각 100명)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 제도통일은 유보

「통노회」 강령 (초안)

1.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에 기초한 6.15남북(북남)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공통성을 귀중히 여기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한다.
3.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동족 사이의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온갖 세력들을 배격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남과 북(북과 남)의 노동자들이 앞장서도록 한다.
4.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애국역량과의 폭넓은 연대와 단합을 실현하며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간다.
5.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북남)노동자회의('통노회')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노조 및 직맹단체들과 평화옹호세력들과의 연대를 적극 도모해 나간다.

문서번호	회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7. 26
공개여부	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1과)
과장	서 호
작성	사무관 여상기

북한 미사일과 MD 개발관련 논문 보고

미 코넬대 서재정 교수가 7.17 “북한의 미사일과 미국 미사일 방어”라는 제목으로 통일뉴스(tongilnews.co.kr)에 발표한 논문요약입니다.

1. 북한 미사일의 개발목적

-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우세한 전력에 대응하여 전쟁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을 추진
 - 북한의 주력탱크(T-62)는 한미연합군이 보유한 탱크(M1-A1, K1-A1) 앞에 '고철'에 불과
 - * 소련제 T-62가 이라크戰에서 미제 M1-A1에 의해 전멸
 - 유지비가 많이 드는 보병은 경제건설에 동원하고, 소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만을 동원하여 미사일 개발에 진력
- 북한군의 전진배치는 한미연합군의 공지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동유럽식 '끌어안기' 전략을 채택한 것임.
 - 북한군의 약 70%가 현재 평원선(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
 - *空地戰 전략은 소련과 동구가 군대를 서방국가 인접에 배치함으로써 나토군을 '끌어안아' 나토의 핵공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2. MD 개발의 목적

- MD체제가 구축되면 ‘공포에 의한 균형’(Balance of Terror)의 전략적 안정성을 파괴되고 미국이 절대적 우위 확보
 - 미국이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망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핵 공격시 미국은 살아남고, 적국은 초토화되는 상황 초래
- 냉전 후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바로 미국 후방의 인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임.
 - 사거리 4000~6000km의 대포동 2호는 괌, 알래스카를 사정권 안에 두기 때문에 군사공격용으로 가치는 적지만 인구밀집지역을 공격하겠다는 위협효과 보유
 - * 북한은 미사일의 목표정확도 보다는 사정거리 확대에 주력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MD체제 구축으로 대응
 -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 럼스펠드보고서(98년) 발표 한달 직후에 발사한 광명성 1호가 ‘미사일 위협론’ 확산 계기

3. 결론

- MD 체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포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못되며, 新무기 도입을 중지하고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임.
 - 한반도 군사대치의 본질은 미-북간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조만으로는 구축하기 어려움.
 - 북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함. [필]

경제 분야

문서번호	회이3127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5. 11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2과)
과 장	조 원 규
작 성	김 선 운

남북대화 재개 관련 세미나 결과보고

남북대화 재개 및 경제협력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최신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초청 세미나 개최(5.10)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남북회담 정세 요인

-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정치권의 대치국면 속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국내 요인
-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향배가 불투명한 주변 요인
- 금강산 관광사업 및 전력지원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만 요인

□ 회담 재개 방안 및 정책 고려사항

-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되, 미국변수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Initiative를 잡는 방향으로 추진
- 금강산 관광사업과 전력협력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표명과 대북식량지원 용의 시사로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 금강산사업에 대한 기금의 한시적 대출, 최소량의 전력지원 약속 등
- 대북지원·경제협력추진관련 국민 설득과 정치권 협조 등 국민적 지지 확산을 위한 정부 노력 강화
 - 국민 정서에 호소하기 위해 상호주의 선별적 적용
- 우리의 경제지원이 저조할 경우 북한내 대화주도세력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대북정책추진시 북한내 유화적 그룹의 입지 배려

□ 남북경제협력 추진방향

- 남북경제협력 추진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보다는 경의선 연결, 4개 경협합의서 이행 등 기존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작업에 집중

- 북한의 가공무역법 제정('01.4.5)으로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방안 강구
 - 당국회담을 통해 간접교역방식을 직교역 체제로 전환
- 물류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경의선 철도·도로 조속 연결 및 남포항 하역설비 지원방안 등 강구
- 휴전선 인근에 남북교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주문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Lead Time을 단축시키는 방안 검토

□

문서번호	회이3120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1. 7. 6
공개여부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2과)
과 장	윤 미 량
작 성	사무관 김 창 모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계획 및 현황

2001. 7. 6

회 담 2 과

1. 추진경과

-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평화위간 금강산관광 관련 합의('01.6.9)
 -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 관광대가 조정 등
-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단절된 국도7호선 연결 필요
 - 해당구간은 2차선 13.7km이며, 지뢰제거작업 및 기존도로의 활용 문제 또는 4차선 확장문제 등 논의 필요

2. 향후 추진계획(안)

- 제2차 경추위에서 도로연결 구간 및 실무회담 개최문제를 협의
- 구체적인 도로연결 문제는 「남북교통실무협의회」에서 협의
- DMZ 통과와 관련된 문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 및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
 - 남북관리구역설정, 지뢰제거 및 공사인원 안전보장 등

붙임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현황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현황

1. 추진경과

- '98.9.7 현대3사(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협력사업 승인
 - 현대-북한 합영투자 방식(투자규모: 95,826천불)
 - * 98.11.18 금강호 첫 출항, 98.11.20 봉래호 첫 출항
- '99.1.15 현대3사 협력사업 변경승인
 - 합영에서 단독투자로 변경(1단계 1억 33만불만 승인)
 - 관광대가로 총 9억 4,200만불(6년3개월) 지불
 - * 2단계: 2억 9,680만불(별도의 정부 승인 필요)
- '01.6.23 한국관광공사 참여 관련 협력사업 변경승인
- '01.6.29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결정
- 기타 협력사업 변경승인
 - '99. 4.14 「풍악호」 투입
 - '00. 1. 8 투자금액 증액(1억 33만불 → 1억 4,800만불)
 - '00. 2.25 「풍악호」 부산항 취항
 - '00. 9. 9 「설봉호」(쾌속선) 취항
 - '00. 9.21 장전항 해상호텔 설치
 - '01. 3.19 카지노, 면세점 관련 승인 유보

2. 관광객 현황('01.6.30 현재)

○ 830항차 411,210명 관광, 항차당 약 495명 승선

- 1주년('98.11-'99.11): 총 141,323명

- 2주년('99.11-'00.11): 총 211,510명

○ 외국인 관광객 현황 : 1,205명

3. 관광대가 지불 현황

○ 관광개발사업 대가로서 현대측은 '98.11 이후 6년 3개월간 총 9억 4,200만불을 지불하기로 약정

- 7.2 현재까지 3억 7,800만불 지불

* 2월분은 200만불 지불하였고, 3월분 이후부터는 전혀 지불하지 못하였으나, '01.7.2
미지급금 2,200만불 지불

※ 6.8 현대-북한간 합의서에 따라 현대측은 금년 6월부터 금강산관광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관광객수에 따른 지불을 포함하여 현대의 능력에 맞게 합
리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정

* 대가지급 방식: 초기 6개월: 매월 2,500만불, 9개월: 매월 800
만불, 60개월: 매월 1,200만불

○ 대가지급은 매월말 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의 북측 계좌로
입금

4. 현대의 자금상황(00.12.31 현재)

○ 현대계열사 전체로 약 4억분 상당의 자금수지 적자

구분	세부내역	금액(단위: 천분)
수입	관광선 수입	199,393
	기타(온천장, 상품판매 등) 수익	26,593
	소 계	225,986
지출	관광개발사업 대가	342,000
	관광선 임차 및 운영비용 등	272,279
	소 계	614,279
총계		-388,293

○ 상기 비용은 현대계열사에서 출자한 「현대아산」의 자본금(4,500억원)에서 대부분 조달

※ 자본금 증자: 1차('99): 1,400억원, 2차('00.1) 700억원, 3차('00.5) 1,400억원

※ 「현대아산」 자본금 출자 현황

- 현대상선(40%), 현대건설(20%), 현대중공업(20%), 현대자동차(5%), 현대미포조선(5%), 현대증권(4%), 현대종합상사(3%), 현대백화점(3%)

5. 금강산 투자 및 개발 현황

○ 현재까지 약 1억 4,000만불 투자

- 편의시설(휴게소, 공연장, 온천장 등)
- 부두시설공사
-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 현지 관광상품 개발 현황

- 금강산 문화회관 및 온정각 휴게소 준공('99.2.28)
- 모란봉 교예공연 개시('99.8.10)
- 온천장 부분 개장, 동석동 코스 개방('99.11.19)
- 금강산 온천장 전체 개장('99.12.30)
- 가무단 시범 공연('00.1.29)
- 온정각 관광식당 개장('00.5.11)
- 장전항 부두 준공식('00.5.24)
- 출입국사무소↔온정각 자율통행 개시('00.11.8)

금강산관광사업 추진일지

- '98. 9. 7 현대3사(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협력사업」 승인('99.1.15 변경승인)
- '98.11.18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매주 월,수,금,토 출항)
 - ※ '98.12.4부터 4박5일 일정에서 3박4일로 변경
- '99. 2.28 금강산문화회관(공연장, 620석) 및 온정각 휴게소 준공
(휴식공간 제공 및 북측 상품 판매)
- '99. 2.24 모란봉 교예단 시범공연 실시
- '99. 3. 9 「풍악호」 출항
 - ※ 3척의 관광선으로 매일 운항
- '99. 6.21 민영미씨 억류사건발생(관광중단)
- '99. 8. 5 관광제개(「관광세척」 등 합의서 체결)
- '99. 8.10 모란봉교예단 공연 개시(1일 1회)
- '99.10.31 외국인시범관광 실시(56명)
- '99.11.19 금강산 온천장 부분 개장, 동석동 코스 개방
- '99.12.30 고성향 본선부두 완공
- '99.12.30 금강산 온천장 전체 개장(대욕장 1,001명, 개별탕 86명 수용가능)
- '00. 3. 9 「풍악호」 부산 취항(동해항에서 부산항으로 변경)

- '00. 5.11 온정각 관광식당 개장(도시락 중식에서 온정각내 중식으로 변경)
- '00. 5.24 고성항 부두 준공식
- '00. 8.20 모든 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한 금강산관광 개방
- '00.10. 1 설봉호 첫 취항(동해항) - 총 4척의 관광선 운항
 - ※ '00.11월부터 「속초항」에서 출항
- '00.11. 8 출입경사무소-온정각 자율통행 개시
- '01. 3.19 카지노, 면세점 관련 승인 유보
- '01. 4.20 봉래호, 풍악호 운항 중단
- '01. 6. 8 북측과 육로관광, 관광대가 조정, 관광특구 지정 합의
- '01. 6.20 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 참여 발표
- '01. 6.23 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참여 관련 협력사업자 승인
- '01. 6.29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금 900억원 대출 결정
- '01. 6.30 금강호 운항 중단
- '01. 7. 2 미지급금 2,200만달러 대북 송금

문서번호	회이3120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1. 7. 9
공개여부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2과)
과 장	윤 미 량
작 성	사무관 김 창 모

금강산관광사업 합의서 공개 관련 상황

1. 상 황

○ 한나라당은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간에 체결(6.8)한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서 등 관련 문건 사본 4건을 공개(7.8)

- 수석부대변인 논평(7.9)을 통해 “북과의 이면제약”이라며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

* 현대아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면합의 없었다고 반박

2. 주요 쟁점에 대한 주장 비교

쟁 점	한나라당 주장	현대아산 주장
이면합의	○ 현대 합의서는 이면 합의서	○ 현대아산이 기자회견(6.10)과 통외위(6.15), 문광위(6.25)에서 밝힌 내용
관광대가 조정	○ 매월 1,200만달러 정액 조건을 인원수로 바꿨다는 주장은 허구	○ 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 관광객수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확실히 변경 - 6월분 관광대가도 1인당 100불씩 7월중 송금할 예정

쟁 점	한나라당 주장	현대아산 주장
사전지 원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공사를 통한 사업지원방침(6.29)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6월말까지 정해 보내기로 한 것은 정부의 사전지원약속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로관광, 관광대가 조정, 관광특구 지정 등이 합의되면 금융기관대출, 컨소시엄 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한 것
평양체육 관건설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김정일 회갑에 맞춰 실내체육관 설립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현대아산종합체육관은 99.9 정부승인을 받고 추진중인 사업으로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정상화 하겠다고 확인한 것

붙임 합의서 내용(보도 정리)

한나라당 논평

현대아산 보도자료

[논평] 국민속이기가 일상화된 政權(정권)

금강산 관광사업을 둘러싼 北과의 이면계약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북퍼주기」에 대한 국민비난이 고조되자 관광공사라는 '돈전달 복덕방' 그리고 '깡통기업 현대아산'을 둘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여보려다 들롱난 꼴이다.

관광공사를 통한 사업지원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현대가 미지급금을 북한에 기일까지 정해보내기로 약속한 것은 '정부의 사전지원약속 보장'을 의미한다.

자칭 들러리인 조홍규 관광공사 사장의 발언으로 그 내막이 일부 탄로난 바 있다.

'매월 1천 2백만달러 정액조건을 인원수 비례로 바꿨다'는 정부 주장도 허구였다.

더욱이 2002년 김정일 회갑에 맞춰 실내체육관 설립까지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어떻게 현정권은 對北지원에 있어서는 늘 국민을 속이고 감추기에 급급한가?

과거 조선시대 中國(중국)을 上國(상국)으로 섬겼듯이, 현정권은 北韓(북한)을 上國(상국)으로 김정일을 上王(상왕)으로 섬기기로 작심했나?

국민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눈속여가면서까지 북에 퍼주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속이기가 일상화된 정권」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허구성 그리고 국민속이기 실체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2001. 7. 9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장광근

합 의 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아산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현대의 형편을 고려하여 관광사업대가를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때까지 현대의 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1998년 10월 29일에 합의된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 기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공동으로 책임지고 노력한다.

3. 금강산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강산지구에서의 육로관광, 특히는 북측의 고성과 남측의 송현리를 도로로 연결한 육로관광을 양측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7월중 당국간 협상이 진행되어 조속한 공사착공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되도록 양측 당국에 건의한다.

2001년 6월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현대아산주식회사를

대 표 하 여

서기장 강 종 훈

대 표 하 여

사장 김 윤 규

확 인 서

1. 현대의 1998년 10월 29일 채택된 <관광사업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2. 2000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미진된 금강산관광대가를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불할 것을 담보하며, 6월21일에 지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확인한다.
3. 실내종합체육관은 2002년 2월까지 완공하는 방향에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6월부터 건설자재를 놓도록 할 것을 확인한다.
4. 6월 8일자 합의서 1항과 관련하여 쌍방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01년 6월 8일

현대아산주식회사
사장 김 윤 규

문서번호	회이3124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1. 7. 9
공개여부	비 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2과)
과 장	윤 미 랑
작 성	사무관 최 용 석

개성공단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1. 개성공단 사업개요

- 위치 :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
- 면적 : 전체 2천만평(산업단지 8백만평, 배후도시 12백만평)
- 사업기간 : 2001-2008년간 3단계 개발
- 사업내용 :

구분	1단계 (2001년)	2단계 (2001-2004)	3단계 (2005-2008)
산업단지 개발	100만평	300만평	400만평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 분야 기업 유치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컴 퓨터, 정밀화학 산업 등 유치	
배후도시 개발	600만평	200만평	400만평
	기존 개성시가지를 활용하여 신업단지 배후 주기단지 개발	신도시를 조성하여 신업단지 배후 주기 단지 개발	국제 자유도시 개발

2. 사업추진 경과

- '99.10월 서해안공단개발 합의서 체결(현대↔아·태위원회)
- '00. 6월 공단 대상지역에 개성지역 포함 합의(현대↔북측)
- '00. 8월 개성 산업단지 후보지 현지조사(현대·토공)

- '00. 8월 「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체결(현대↔민정련)
- '00.11월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합의서 체결(현대↔토공)
 - 토공은 자금조달, 설계 및 감리를, 현대는 시공을 담당하고 사업계획 수립, 분양·관리 등 제반업무는 공동수행
- '00.11월 사업부지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 착수(현대·토공)
- '00.12월 공단운영조건 및 기업활동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성공단특별법」 제정 촉구(현대·토공→북측)
 - 토지 70년 무상임대, 고용·임금·통행·세제 문제 등
- '00.12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01.2~3월중 개성공단 실무협의회를 개최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미개최
- '01. 1월~현재, 토공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추진중이며, 현대는 기업 유치활동 전개중(230개와 업체 입주협약 체결)

3. 대북 협상 과제

-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및 개성공단 실무협의회를 조속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당국간 협의 추진
 - 사업자 현장사무소 설치 및 기공식 개최
 - 공사용 자재·인력·장비의 판문점 통과
 - 전력·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문제
 - 개성공단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7장 28조로 구성된 법 시안을 민간차원에서 현대가 북측에 이미 제시한 상태이며

- 주요내용은 투자의 자유 및 보장, 반출입의 자유,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 보장, 노동력 공급,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특혜관세 실시, 통화와 금융, 송금보장, 세금감면, 출입·체류·통행·통신 보장, 상사분쟁 해결 등임

※ 경협4대합의서가 발효된 경우, 투자보장, 이종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에 관한 문제는 별도협의 필요

4. 기 타

○ 북한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Infra 구축 추진

- 전력공급에 대한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자부·한전이 공급방안 마련

※ 북측의 50만KW 전력요청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할 것을 정부내부간 잠정결정한 상태

- 통신시설은 한국통신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음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용수시설은 북한이 설치하고, 2·3단계 용수공급은 남북간 협의하는 방안 추진

※ 건교부는 2단계 개성공단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임진강 수방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

문서번호	회이3120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1. 7. 10
공개여부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2과)
과 장	윤 미 량
작 성	사무관 김 참 모

경의선 연결사업 추진계획 및 현황

2001. 7.10

회 담 2 과

1. 공사진행 현황

- 우리측은 철도 60%, 도로 46%의 공사 진행(7.1 현재)
- 북측은 지난 동절기 작업중단이후 현재까지 작업 미재개
 - * 5월 중순이후 개성시 남촌골 지역에 군 숙영지 천막 20여동 신축 등 공사재개 준비 가능성(연합통신 보도)
- 「남북군사당국간합의서」 서명지연으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 미착수

2. 향후 추진계획(안)

-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북연결 철도 ·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서명 · 교환 추진
- 제2차 「경추위」에서 「남북교통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
 - 「경의선 실태 공동조사단」 구성 · 운영 문제 및 실태 조사 방안
 - 준공일정, 접속지점 공사방법, 통행방법
 - 여객왕래 및 화물운송관련 각종 합의서 체결 등 협의

붙임 사업 현황, 추진 일지, 위치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현황

1. 사업 내용

- 철도연결 : 문산~군사분계선 12km(남측)
- 도로연결 : 통일대교북단~군사분계선 5.1km(남측)
- 총사업비 : 1,804억원(당초 1,512억원)
 - ※ 철도청 712억원, 도로청 761억원, 국방부 331억원
- 사업기간 : 2001년 9월 완공을 목표(당초)

2. 사업추진 체계

- 통일부 : 철도·도로연결관련 대북협의를, 사업발주 및 소요예산(기금) 지원
- 건설교통부(철도·도로연결사업추진단) : 사업총괄
 - ※ 건교부차관을 단장으로 12개 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3회 회의 개최
- 철도청 : 철도건설(노반, 건물, 궤도, 전기공사 등)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도로건설(구조물·포장공사 등)
- 국방부
 - 1군단 : 지뢰제거 및 경계지원
 - 육군건설단 : 민통선지역 및 비무장지대 노반공사

3. 추진 현황

가. 우리측 공사현황(7.1 현재, 금액기준)

- 철도 공정율은 60%(비무장지대이남 66%)
 - 비무장지대이남 노반공사 96%
 - 구조물 68%, 궤도 74%, 신호·전력·통신 40%
- 도로 공정율 46%(비무장지대이남 68%)
 - 비무장지대이남 노반공사 91%
 - 구조물 87%, 포장공사 33%
- 비무장지대이남 철도·도로 전구간 지뢰제거 완료
(출입관리시설 일부 부지 제외)

나. 북측 공사현황

- 북측은 작년부터 공사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나, 동절기에 작업을 중단한 후 현재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음

- 최근 공사현장의 인력·장비를 인근 토지정리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북측은 비무장지대 공사와 관련된 '남북군사당국간 합의서' 서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착수 일정 불투명(당초 3월말 착수예정)

4. 공기 및 적기 완공 노력

가. 공 기

○ 비무장지대 공사는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된 후 철도는 8개월, 도로는 12개월 소요

- 기술적으로는 7월부터 비무장지대 공사에 착수할 경우, 철도는 내년 3월, 도로는 내년 7월 완공가능 추정

※ 철도는 지뢰제거 3개월, 궤도 및 노반공사 3개월, 우기 및 혹한기 2개월

※ 도로는 지뢰제거 3개월, 구조물공사 등 본공사 6개월, 동절기 공사중단 등 3개월

- 비무장지대이남의 공사는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

※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측보다 공사소요기간이 짧을 것으로 판단되나 훼손된 마미천 교량(256m) 보수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나. 적기 완공 노력

- 철도·도로연결이 적기에 이루어져 개성공단개발, 남북관계 행사 등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경주
 - 철도부터 우선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 우리측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이남의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
 - 비무장지대 공사는 북측과 공사착수에 합의하는 즉시 본격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5. 출입관리시설(CIQ) 건립

- 철도·도로 연결시점에 맞추어 기배정된 예산(188억원)의 범위내에서 부지매입, 기초시설 정도만 확보

- 철도운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시설확충

※ 교류협력법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출입심사)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일부가 동시설을 설치·운영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일지

- 1984.11.15 남북경제회담, 남북 공히 경의선 철도연결 제의
 - 우리측은 실제 연결에 대비하여 경의선 실시설계 실시
- 1990.9~1991.12 남북고위급회담,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개설키로 합의
 - 남북기본합의서('91.12.13) 및 부속합의서('92.9.17)에 합의 내용 규정
- 2000. 3. 9 베를린선언, 대북 SOC건설 지원의사 표명
 - 북한당국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
- 2000. 6.15 「6.15 남북공동선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
- 2000. 7.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경의선 철도연결 합의
- 2000. 9. 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문산-개성간 도로연결 합의
- 2000. 9.18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기공식 거행

- 2000. 9.27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비무장지대 출입허가, 안전보장 및 관련 실무회담 개최, DMZ내 관리 구역설정 등 합의
- 2000.11.28~2001. 2. 8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1-5차)
 -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연결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타결

문서번호	회이3120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1. 7. 10
공개여부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2과)
과 장	윤 미 량
작 성	최 문

남북어업협력 쟁점 · 방향

1. 개 요

○ 남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어업부문의 상호협력을 합의('00.12.16)

-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제공

2. 동 어장의 실체

○ 북측이 제공하겠다는 동해북측어장은 2000.2.26 우리측의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연합회」가 합의한 지점과 일치⇒ 「동해어장(은덕어장)」

- 원산에서 300km(100해리) 이원수역으로 수심 2,500m~3,000m, 너비 34,000km

○ 동 해역은 '77~'93년간 북일어업협정에 근거 일본에 제공된 바 있으나 '93년 어획고 감소로 철수

3. 우리어민 입장

- 북측이 제공하겠다는 동 수역에서의 조업은 절대 불가
 - 동 어장의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당 수역 조업이 가능한 어선은 적어도 20톤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대형어선의 출어로 영세어민(90%)의 피해가 지대
 - 반면에 조업구역을 원산 12해리 내지 50해리 이원수역으로 조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표출

4. 대책방향

-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서로의 공동이익이 창출되도록 어업 협력 추진
 - 협상결렬시 제3국(러시아 등)이 북측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동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우리측이 입게될 손해 등도 고려
- 북측이 제공하려는 어장을 「동해어장(은덕어장)」으로 한정할 경우 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을 고려, 대북협상 시 연안쪽에서의 어장조정 요구. <끝>

문서번호	회이3120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1. 7. 11
공개여부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2과)
과 장	윤 미 량
작 성	최 문

남북해운운송의 문제점 · 대책

1. 개 요

-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92.2 발효)에서 남북해로개설에 합의(제19조)
 - 동합의서 부속서 제3조 ①항은 남쪽의 인천·부산·포항항, 북쪽의 남포·원산·청진항의 개설에 합의

2. 동 합의서의 특징

- 남북은 동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설정
 - 이로인해 남북간의 해상운항에서 야기되는 각종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움(쌍방이 자국규정 우선적용 추구)
 - 또한 북한의 국제협약 비준실적이 미미하여 남북간 해상분쟁에 있어 국제법적 적용도 완전치 못함

3. 남북간 해상운송상의 문제점

- 우리의 해상관련법은 남북한간의 해상운항을 내항운항으로 취급, 외국선사의 남북한 운항을 원칙적 배제
 -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간 해상운항은 국적선박이 아닌 제3국 선박이 주종을 이룸
 - * '99년 국적선박 운항율(횡수기준) : 12%(1,714회 중 212회)
- 또한 남북한간 해역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구난·피항항 등에 대한 합의부재로 운항선박의 위협노출 상존

4. 대책방향

- 향후 있을 남북장관급회담 등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추진을 위해 남북해운당국자간 회담 제의 및 남북해운실무자급회담 정례화 추진
 - 동 합의서에서 남북해상운항을 내륙운항으로 규정하는데 따른 국제법상 마찰에 대비 충분한 대응논리 요. <끝>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보고

2001. 7. 27(금)

회담2과(소봉석)

1. 개 요

○ 일 시 : 2001. 7. 26(목) 19:00~

○ 장 소 : 경도일식(송파구)

○ 참석자 : 총 12 명

- 토지공사 : 구관서 부장, 이근수 과장, 김무홍 과장(개성사업단)
- 현대아산 : 하성덕 이사, 이정우 이사, 한금섭 차장(개성사업단)
- 국 정 원 : 정성태, 백인기 사무관(교류협력과)
- 통 일 부 : 추석용 사무관(교류협력국)

※ 회담사무국 : 회담2과장, 석명학, 소봉석 사무관

2. 주요 토의내용

□ 사업추진 현황

○ 1단계 기본계획은 완료, 공단 기본설계는 45% 진행(토공)

* 10월중 기본설계 완료 예정

- 공단 입주 중소기업 유치 활동 계속 추진(현대)
 - 남북대화 소강 상태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

□ 사업추진 지연 관련

-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소강상태 지속 등 외부환경 악화
- 북한측의 개방의지 및 속도에 대한 방향 미설정, 기반시설 설치 능력 부재, 접경지역 개방에 따른 군부의 반발 예상

□ 당국간 실무협의회 개최시 예상쟁점

- 북측은 전력공급 및 용수·전기·통신 등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남측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
 -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은 국민여론 악화 및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유치 실패 원인 제공 우려
- ※ 기타 토지임대료, 육로통행보장 등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북측은 사업주체간 협의를 내세워 당국간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

□ 향후 전망

- 금강산 육로 관광 문제의 해결이 선차적이며, 동 문제가 해결되면 개성공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현대)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공단 분양가 최소화 >

-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공단지 수준(평당 10만원)이 적정(토공)
 - 그러나 북측은 기반시설 설치, 토지임대료, 고임금 등을 우리측에 전가할 우려가 있음.
- ⇒ 당국간 협상시 비용 최소화 문제 우선 협의 및 협력기금 등 지원 필요

< 현대-토공간 협력관계 >

- 토공측은 현대의 자금, 기술·전문성 부족 등으로 현대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으며
 - 북한 유현공단(나진선봉) 개발관련 협상 노하우가 있어 북측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
- 현대측은 대북사업을 성사시킨 주체로서의 지위 및 북측과의 신뢰관계를 내세워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 ⇒ 통일부 주도로 대북협상력 강화 및 상시 업무조정을 위한 우리측 상설협의체 구성 고려

문서번호	화인3124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7.27
공개여부	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2과)
과장	윤미량
작성	7급 이용우

남북철도망(TKR)과 대륙횡단철도 연결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7.26)로 북·러간 논의된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 연결문제와 관련 남북철도망(TKR)과 대륙횡단철도 연결문제에 대해 교통개발연구원(KOTI)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보고합니다.

1. 남북철도망(TKR)과 대륙횡단철도 연결필요성

- 동북아 지역이 세계의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도약
 - 세계 정기선에 있어 아시아비중이 1985년 28.5%에서 1996년 44.3%로 증가
 - 해상운송 대체수단으로 대륙횡단철도의 활성화 요구의 증가
- 한국, 북한, 중국, 홍콩 등의 유럽에 대한 교역량은 연평균 11.9%의 높은 증가세 보임
 - 2006년 세계시장 점유비가 50%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 최근 언론은 김정일위원장 방러시 TKR(남북철도망)-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도

— < TSR(시베리아횡단철도) > —

-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노선
 - 만주경유노선(1904), 러시아 본토 노선(1916) 완공
- 최초로 아시아-유럽간(일본-스위스) 화물운송수단으로 이용(1967)
- 일본-나호트카 정기항로 개설로 TSR서비스체제 정비(1971)
- TSR은 1983년을 최고로 이후 경쟁력을 상실, 해상운송과의 경쟁에서 밀림
 - * 현재 아시아-유럽간 물동량의 약5%만을 담당하고 있음

2. 남북한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 연계방안

- 1노선 : 부산-서울-문산-개성-평양-신의주-단동(중국)-TCR(중국횡단철도)-아라산쿠(중국)-드루즈바(카자흐스탄)-TSR(시베리아횡단철도)
- 2노선 : 부산-서울-신탄리-평양--두만강-하산(러시아)-TSR
- 3노선 : 부산-서울-신탄리-평양-남양(북한)-도문(중국)-TMR-(만주통과철도)-만주우리역(중국)-자바이칼스크(러시아)-TSR
- 4노선 : 경의선-문산-개성-신의주-단동(중국)-북경-에렌호트(중국)-자민우드(몽골)-TMGR(몽고통과철도)-호이트(몽골)-나우츠키(러시아)-TSR

* ① 남한, 북한, 중국은 표준궤를 ②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광궤를 사용하므로 양지역 통과시에는 화물 환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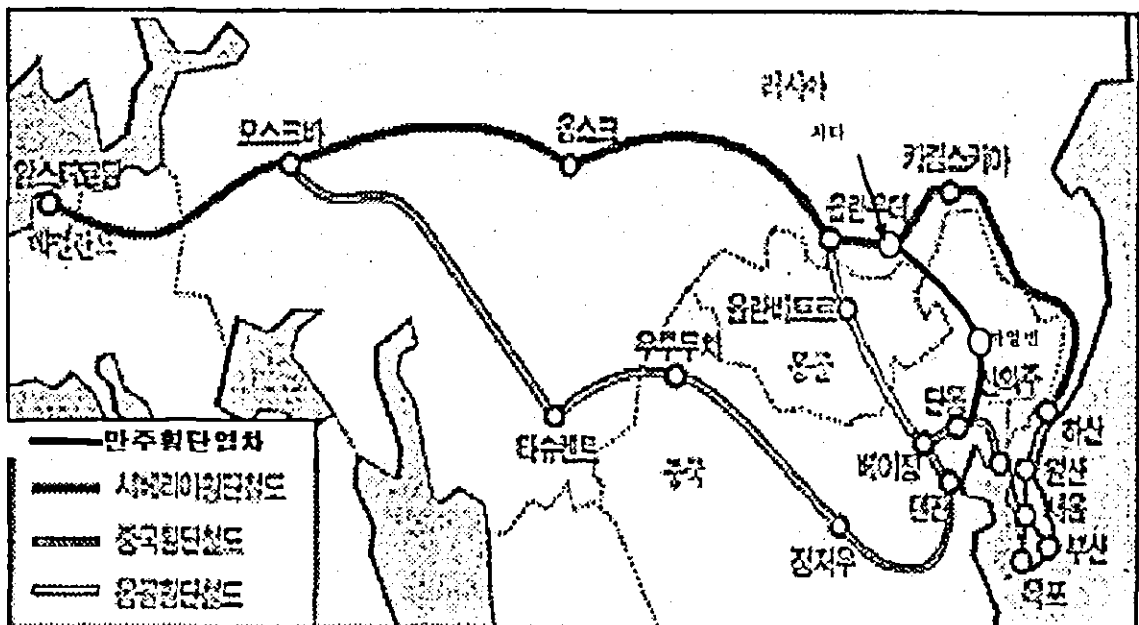


그림 : 남북철도연결망(TKR)-대륙횡단철도 연계도

3. 남북한 철도망 연결에 대한 관련국 입장

가. 북 한

- 김정일은 1994년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의장과 면담시 남북 철도망 구축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 표명
 - “동북아 지역 물류수송 수수료로 한해 15억달러 수익” 언급
- 1996년 ESCAP회의에서 채택된 남북한연결철도(TKR) 복원 결의안에 대해 북한도 묵시적으로 동의
- 북한·중국간 라진-남양간 철도 공동조사사업 실시(1998년)
 - 북측은 동구간 철도 보수를 위해 중국의 투자를 요구
- 2001년 2월 북·러 신우호조약 체결시 시베리아철도 활성화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북한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해 중·러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짐

나. 중 국

- 한·중간 철도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98.11.12)
 - 철도차량의 개발·생산, 아시아 횡단철도망 운영 등에 상호협력키로 함
- 2000년 한·중정상회담에서 조인된 한·중 철도협정은 중국이 남북철도망과 중국횡단철도(TCR) 연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반증
 - 중국 동북3성의 지하자원 수출 등 새로운 운송루트 개척이 필요

다. 러시아

- 러시아는 1997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활성화를 위한 러·일간 협력 합의
 - 남북철도 연결망은 TSR의 활성화, 연해주지방의 건설촉진, 내륙지방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측, 러시아로서는 적극추진
- 한·러 철도장관 회담(2000.10.11) 및 한·러 철도 실무회담 개최(2000.11.28)
 - TSR 연결을 위한 남북한에 철도대표부를 설치할 용의 표명
 - 북한의 원산-두만강 구간의 노후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의향 표명
- 남북러 3자 철도장관급회담을 남북에 각각 제의(2001년2월)
- 한·러 철도회담 개최(2001.2.28)
 - 러시아는 경원선 현대화를 위한 운영회사 설립을 제의

4. 남북연결철도(TKR) 구축시 기대 효과

- 수송물류비 절감효과에 따른 남북교역 및 경험활성화
 - 수송일수(해상운송보다 약 5일 단축, 약2일소요)
 - 물류비용(컨테이너 1개당 500달러 절감, 약200~300달러)

○ 북한 경제발전에 기여

-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물동량 흡수로 인한 매년 고정수수료 이득 발생(일부 학자는 2005년 1억5천만달러 수익 예상)
- 경의선 통과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이 기대됨
- 경원선-평라선 과 TSR의 연결은 두만강지역·나진-선봉지역의 개발을 촉진
- 한반도 동해안 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연계관광시장 형성도 가능

○ 개성공단 조성과 연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 서해안공단 생산물품의 저렴한 운송수단 확보로 활발한 물류교류 예상
- * 경제적 일체감 및 사회적 동질감 제고에도 기여, 궁극적으로 통일비용 절감의 효과 발생

○ 한반도가 아시아-유럽대륙의 수송물류 중추역할 담당

- 한반도횡단열차(TKR)와 시베리아횡단열차(TSR)등 대륙횡단열차와의 연결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운송네트워크가 형성됨을 의미
- 이는 우리 산업제품의 저렴한 운송수단의 확보로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동북아시아의 지하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을 결합시키는 등 동북아 경제권 구축에 기여

- 남북간 군사협력을 유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제거, 남북관리구역 설치 등 남북간 군사적 협의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5. TKR-TSR 연결을 위한 우리측 대처방안

- 경의선 연결논의를 위한 경추위 및 실무협의회 개최
 - 북측과 준공일정 및 공사방법 등을 협의·타결 필요
 - * 러시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경원선을 통한 TSR 연결논의도 병행 추진하도록 함
- 남북 통행에 관한 협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해야함
- TSR 통과 사회주의권 국가와 긴밀한 국제협력 필요
 - 철도 운영시스템의 정비, 노후시설의 교체 등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소프트웨어 개발에 노력해야함
 - 범동북아철도운송망을 구축, 우리상품의 가격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함

문서번호	회이31240-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01. 7. 31
공개여부	공개

작성	과장	부장	국장
		전결	

〈민간 대북협상 유경험자 초청〉

간담회 결과보고

일시 : 2001. 7. 30(월) 14:00

장소 : 남북회담사무국 3층 세미나실

대상 : 현대아산 육재희 차장

남북회담사무국

(회담 2과)

1. 일반 사항

o 일시 및 장소 : 2001. 7.30(월) 14:00, 남북회담사무국

o 참석자 : 8명

- 연사 : 현대아산 육재희 차장

- 국내 : 회담 2·3과장, 소봉석·하태만·김창현·이성원·
김창모 사무관

o 주제 : 대북사업 및 협상 어떻게 해야 하나

2. 주요 논의 내용

가. 사업 준비단계

o 사업 아이템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 및 대외경쟁 우위 분야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북한 호응을 유도하는데 용이

-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북한의 4대난(식량, 에너지, 외화, 생필품)과 관련 있는 분야임.

- 대외경쟁 우위 분야는 저렴한 노동력 활용 분야, 문화예술 분야, 자원개발·이용 분야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구매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골프장·카지노 등 북한내 외국인 수요자를 겨냥한 사업도 고려해 볼만 함.

o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단순교역 또는 임가공 사업이 적절

-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영·합작보다 북한 당국이 선호

0 초기 사업제의 및 협의는 북측이 신뢰하는 중개인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

- 북측은 중개인을 보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경향 농후

* 과거에는 중국 조선족, 재일·재미 교포가 대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북측의 신뢰를 받는 남한 기업이나 단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나. 대북 협상전략 수립

1) 북한 협상전략의 특징

0 벼랑끝 전술 구사

- 협상 막바지까지 요구 관철을 위해 문제 제기, 사업 중단 위협 등도 불사

* 북한은 협상을 “목숨을 건 싸움”, 양보는 “계급투쟁에서의 패배”로 인식

0 포괄적 합의후 이행시에 문제 제기

- 합의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 이행단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함.

*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에도 통신회선을 100회선 운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8-9회선만 허용했으며, 간단한 시설물(벤치) 설치에도 6개월이 소요된 바 있음.

0 밑에서 문제제기 위에서 해결

- 협상자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협상자를 통해 다시 해결하는 사례 발생
- * 온천장 개장시 온천수에 대한 별도의 댓가지불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실무진은 온천수에 대한 댓가지불을 요구

0 북측 협상 참석자들의 역할

- 실무적인 문제는 「참사」가 담당
- 「지도원」은 보위부 출신으로 표면적으로는 협상에 관여하지 않으나 사실상 사업추진의 결정권을 보유

2) 우리측 협상전략의 수립

- 0 협상장소는 초기에는 제3국으로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평양에서 하는 게 효과적
 - 신속한 의사결정 면에서는 평양이 유리하지만 협상 분위기 조성, 북측 협상자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는 제3국이 유리
- 0 협상기간을 사전에 못 박는 것은 부적절
 - 금강산관광사업 협상 초기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9월부터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으로써 협상 주도권을 상실

- 복수의 협상자 참여, 사전 의견 조율 및 협상자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협상에 대처
 - 지나친 자유분방, 우리측 협상자간 의견충돌 지양
 - 역할 분담은 Main speaker, 분위기 파악(협상전략 수립), 기록 유지 등으로 구분

- 가급적 북측에 협상자와 계약 이행자(실제 사업자)가 동시에 참석해주도록 요청
 - 사업시행시 계약 이행자가 협상자와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 차단

- 실무적으로 세부조건까지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
 - 원칙이 타결되었어도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타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실무적인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협상해야 함.

- 중요한 사항에 대한 대안 및 북측 설득 논리 준비
 - 북측의 예상 질의·답변에 대한 우리측 대안을 철저히 준비
 - 북측을 설득함에 있어 논리적 설명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북측에 예상되는 기대효과(수익)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다. 합의서 작성

- 합의서 초안은 우리측이 항상 먼저 준비하는 것이 유리
 - 합의서 초안에 기초하여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하는 효과 발생

- 북측의 합의서 수정에 대비하여 즉석에서 제시할 수 있는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
 - 막연히 합의서 초안을 검토해보라고 전달하는 경우, 북측의 검토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 초래

-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함.
 - 북측 협상자들의 빈번한 교체로 구두 약속은 이행 보장 곤란
 - 구두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변경시키는 사례도 발생

- 합의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세금·부과금·벌금 문제, 외환거래 및 송금, 투자보장 및 사업중단시 보장, 광고문제, 각종 인허가, 통행·출입국, 체류기간, 서비스(통신·물·전기) 가격, 신변안전 등

〈끝〉

문서번호	회이3124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7.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답사무국(회답2)
과장	윤미량
작성	소봉석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추진현황

1. 추진경과

-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조속한 시일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진강수해방지 사업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및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경추위 제1차회의 합의문)
 - 남북 쌍방은 각기 「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임진강수방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 우리측은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 수정안을 북측에 전달(대북서한, '01.3.3)
- *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없음.

2. 실무협 1차회의시 쌍방 입장

- 우리측은 임진강유역의 수해를 방지하고 쌍방에게 혜택이 돌아갈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공동조사가 필요함을 강조
 - 전반적·종합적인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고 쉬운 사업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
- 북측은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
 - 근본적인 대책으로 '산림조성, 강하천 정리, 댐건설'을 제시
 - 특히 임진강수방의 근본은 언제(댐) 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측지역(이천)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남북 쌍방은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 북측이 북측지역 댐건설을 기정사실화 시켜보려는 의도를 표출함에 따라 후속회담 중단

3. 향후 추진방안

- 우선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실천가능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 견지
 - * 홍수에경보시설 설치, 하천준설, 제방축조, 댐건설 등

- 우선 지난 3.3 북측에 전달한 「공동조사 합의서」 수정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합의서 타결에 주력하고
 - 향후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차기 실무협의회 개최도 추진

- 공동조사가 합의되는 경우에는 우선 공동조사 기간중이라도 시급한 홍수에경보시설은 금년중 착수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 ※ 최근 금강산댐 문제와 관련, 향후 대화 재개시에는 남북접경지역 공유하천을 대상으로 남북한 수자원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문서번호	회이3124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7.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회담2)
과장	윤미량
작성	소봉석

남북전력협력 추진현황

1. 추진경과

- 남북 쌍방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력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전력협력실무협의회 및 전력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전력협력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경추위 제1차회의 합의문)
- 우리측은 전력실태 조사 후에 전력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입장인데 반해 북측은 우리측의 전력제공 기정사실화를 기도하여 후속회담 중단(전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2. 남북회담시 쌍방입장

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 북한은 송전의 방법으로 200만kW를 제공하되 우선 50만kW를 긴급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우리측은 전력지원 문제는 먼저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득

나. 경추위 제1차회의

- 북한은 전력협력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며 동 회의에서 전력제공량, 제공방법, 시기를 확정하자고 주장
- 우리측은 양측의 전력사정과 운영상황·기술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

다. 전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 북한은 200만kW, 당면하게 50만kW 송전은 원칙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50만kW 송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
- 우리측은 장관급회담에서 전력제공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실태조사의 목적은 남북전력협력의 합리적·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

3. 향후 추진방안

- ~~남북전력협력은 북측의 전력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남북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하되~~
 - 우선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사전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간 구체적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 견지
- 남북간 전력실태 조사방안에 합의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한 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력협력 방안 모색
- * 우리측 선제적은 지양, 북측이 2차회의를 제의하는 경우에는 적극 대응

〈남북전력협력 추진체계〉

- 상호 자료교환을 통한 이해 도모 → 자료 검토 및 전력실태조사단 구성 → 실태조사 실시 → 경추위에 조사결과 보고 → 구체적인 전력협력방안 도출

사회문화 분야

문서번호	회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5. 18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회담3과)
과 장	서 호
작 성	행정사무관 김 충 환

사회문화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 결과보고

사회문화분야 남북공동사업 및 남북대화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이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인배 민예총 기획실장) 초청 세미나 개최(5.17 목 15:00~17:00)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북측 입장 분석

-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6.15 남북공동선언 준수 차원에서 사회문화분야 공동사업과 남북대화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지속
 - 노동절 행사 개최, 6.15 특집을 위한 KBS 제작진 방북 허용 등
- “모기장론”에 따른 경제속에 사회문화분야 공동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반대급부도 포기하기 어려움
- 저작권법 등 개정 및 아태·민경련·민화협간 업무 재조정 등 나름대로 사회문화분야 공동사업 확대와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한 제도 및 기구 정비

2. 추진상의 문제점

- 사회문화분야 공동사업 확대 및 남북대화 저해요소로는
 -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사회문화교류를 저해하는 법·제도의 상존, 한견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단체의 무분별한 경쟁, 정부 부처간 협조체제의 제도화 미흡 등

3. 추진방향

-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동질성 재창조”의 차원으로 통일민족문화에 대한 논의 전개 유도
- 민·관 합동으로 가칭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대북사업 추진 민간단체 및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여 상호 경험과 지식을 공유
 - * 다양한 사회문화분야간 network 형성으로 효율성 제고
- 전반적인 남북대화 틀 속에서 사회문화분야 공동사업 및 남북 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 정비
 - 남북문화협정 체결 추진, 사회문화협력기금 조성 등
- 당국간 회담시 민간단체의 유망한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남북합동 평화통일 문화사절단 해외순방, 문화박람회 공동개최 등

<언론대책 : 비공개>

㉔

문서번호	회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6. 4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회담3과)
과 장 서 호	
작 성	행정사무관 이성원

적십자회담 대표단 간담회 결과보고

1. 개요

- 일시 · 장소 : 2001.5.31(木) 19:00, 서초대원(서초동 소재)
- 참석자 : 9명(대표3, 수행원3, 관계관3)

2. 의견수렴

- 향후 회담시 북한의 능력을 감안한 대북 제의 건요
 - 북한은 경제적부담, 행정력의 부족 등으로 대규모 이산가족교류에는 부담. 따라서 생사·주소확인 이나 상봉대상자의 규모를 그들이 수용 가능한 선으로 요구
 - 현 상황에서는 지속적이고 정례화된 대화 채널을 유지함이 시급
- 또한 북한의 많은 이산가족들은 신분상의 위해를 두려워하여 상봉을 기피하고 있음이 현실
 -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되나, 만남의 장에 나오면 경제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여건 조성 필요.
 - ※ 이를테면 현금(달러)선물 가능토록 합의 유도
- 북측의 협상대표단이 재량권이 별로 없음을 감안한 협상전략 건요
 - 우리의 입장에서 실현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제안도 시간을 가지고 대처, 즉 상부의 지시를 얻도록 유도하거나 막후 실무접촉에서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방법도 필요

//끝//

문서번호	회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6. 4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3과)
과 장	시 호
작 성	사무관 김중환

6.15 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 관련 회의 결과보고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와 6.15~8.15 공동행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우리측 민간단체 실무접촉 대표단과 정부관계자와의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일반사항

가. 일시·장소 : 2001. 6. 3(일) 10:00~11:30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 3층 회의실

나. 회의목적 : 정부측 입장설명 및 의견수렴

다. 참석자

○ 대표단

- 단장 : 김중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종단)
- 대표 : 변진홍(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도각(불교종단대표), 조성우(민화협 집행위원장), 이승환(민화협사무처장), 한상렬(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통일연대),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통일연대)

* 수행원 : 오훈동(천도교), 김창수(민화협), 김이경(통일연대), 김영철(MBC), 정일윤(MBC)

○ 정부관계자

- 통일정책실장, 이종렬 상근위원, 서영교 5국장, 회담운영부장, 회담3과장 외 관계관

2. 토의내용

가. 「실무접촉시 유의사항」 (이종렬 상근위원)

- 대한민국 대표라는 점에 유념하여 단장 주도하의 회의 진행 등 회의시 발언요령, 가급적 논쟁은 회피하는 등 발언시 유의사항, 북측 호칭, 용어 선택 등 북측대표 접촉요령 등을 설명
- 인내심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실무접촉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
 - * 설명도중 한총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통일연대)은 “우리도 판단력이 있으니 간단히 해 달라”고 요구

나. 「통일대토론회에 대한 정부입장」 (통일정책실장)

-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민간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거의 모든 민간단체를 망라한 하나의 추진본부하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실천함에 있어서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함.
- 이번 실무접촉은 당국간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열리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더욱 큼.
 - 민간단체의 대표 중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람.
 - 일각에서는 민간단체만의 행사 진행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어 신중한 추진을 당부 드림.

-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실천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북측을 포용하는 자세로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시기 바람.
 - 본질적이 아닌 것은 북측 요청을 수용하되,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측 입장 견지 요망
- 이번 접촉에서는 6.15 행사에 초점을 맞춰 협의하시고, 그 후에 6.15~8.15 행사문제를 협의토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장이신 김종수 신부님을 중심으로 접촉에 임하시고 대표들이 협조해서 성숙한 자세를 북측에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 우리측 인내심을 가지고 포용해서 성과를 거두기 바람.
- 회의후 동해 도착시 언론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람.

다. 「실무접촉에 임하는 대표단의 기본입장」 (대표단)

- 정부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민간대화가 잘 풀려서 당국간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점과 민간단체에 대한 염려 등 정부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
 -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보다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모색해 나갈 것임.
-
- 정부가 힘을 가져야만 남북대화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힘을 빼는 일보다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북측의 상황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합의문을 이끌어내도록 노력 하겠음.

-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결말짓자고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으며, 형제적인 마음으로 만나서 형제적인 우애속에서 합의점 도출 노력

(김종수 단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

- 6.15남북공동선언을 살리는데 있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며,
 - 이번 접촉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협의하여 북측과 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정부당국은 6.15~8.15 「민족통일촉진기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랄 뿐임.

(한상렬 전국연합 상임지도위원, 통일연대)

- 김종수 단장이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정부당국에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람.
- 민간접촉이 정부당국간 교류로 이어나가길 바라며, 남북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만남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함.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통일연대)

<언론대책 : 비공개>

끝

※ 별첨 : 회의내용 전문

공동선언 1주년
기념 오찬행사

질문 · 답변자료

2001. 6. 15

1. 지난 3월 이후 남북간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곧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꾸준히 진전되어 나갈 것임
 - 이미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협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음
 - 북한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개방과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함
 - 그런가 하면,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
- 특히 최근 미국이 대북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가 사업주체간에 합의되는 등 주변 상황과 여건이 정리되고 있음
 - 조만간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도 정상상태로 복원될 것으로 생각함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나와 김정일 위원장이 굳게 약속한 사항일 뿐 아니라, 6.15 공동선언에 명시한 사항임
 -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남북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와 대북대화 재개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그동안 미국정부는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또 우리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 왔음
 - 그 결과, 지난 6일 부시 대통령이 대북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미북간 현안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한반도 정세흐름과 남북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또한 북한도 대미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양자관계는 꾸준히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음
-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는 교호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서로 앞서거나 뒤처지거나하면서 진전되어 나갈 것임
 - 다만,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면서, 한반도 정세 전반을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3. 남북정상회담이후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도 기업이 안심하고 북한에 투자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북한의 열악한 경제여건과 남북간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그동안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남북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음.
 - 지난해 남북이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함에 따라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고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하였음.
 - 또한 대북경협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해결 등 4개 합의를 채택,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물적, 제도적 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경제공동체 건설차원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문제도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임.
-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도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람.

4.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북한동포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는 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기초한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 또한 대북지원은 남북간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봄.

- 남북간 상호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임.

- 나아가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의미도 지니고 있음.

○ 다만, 우리의 경제상황과, 국민 정서, 북한식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임.

5. 금강산 관광사업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현대와 북한측이 활성화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런 점에서 최근 사업자간에 활성화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특히 이번에 육로관광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관광로가 마련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
 -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에 이어, 동쪽의 남북을 연결하는 길이 열리는 것임
-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따라서 육로관광로 처럼 남북의 당국이 직접 합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6. 최근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그리고 월정한 우리어선이 피격되는 일이 생겨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도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 모든 문제는 우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서 군사강경조치 등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순리
 - '99년 서해교전사태때도 마찬가지였음
 - 우리의 영해관할권 행사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또 군사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되, 우선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북한 선박이 생필품을 적재한 민간상선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있어 우리 군이 침착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봄
- 반면, 같은 맥락에서 북한측이 월정한 우리측 어선에 대해 총격을 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 북한측에서도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 평화적인 해결노력을 우선해 주기를 희망함
- 이번 영해침범시 정부가 평화적 해결노력부터 기울인 것에 대해 안보불안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맞지 않음
 - 만약 무력행사부터 했다면, 국제여론은 악화되고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대북정책은 상당한 장애를 맞게 되었을 것이며, 나아가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졌을 것임

7. 지금 우리도 유례없는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가뭄피해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좋은 지적임

- 이제는 남쪽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바라봐야 함

0 우리도 심각하지만, 북한에는 천수답이 많고 산에 나무가 없어서 더욱 심각함

- 최근 북한방송(6.5 중앙방송)을 보면, 3월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133만여정보(전체 농경지의 72%)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함

* "올해 가뭄은 1727년 大旱害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고 언급

- 5.21 국제기구와 NGO가 공동으로 북한가뭄실태를 조사했는데, 이모작 작물과 현재 파종기인 옥수수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0 올 가을 추수도 문제이지만, 봄밀·감자·보리 등 봄 작물 수확이 어려워짐으로써 당장 추수때까지 식량배급에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 우리 정부도 계속 그 추이를 파악해 나갈 것임

- 또한 북한측도 자구노력과 함께, 식량사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지원식량의 분배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봄

8.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전적으로 동의함.

○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원동력인 우리 국민의 지지와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런 점에서 정부는 「더불어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발을 맞추기 위해 노력

-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회등과 협조하여 국민각계각층의 의견을 여과없이 수행해 나갈 것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9. 6.15 공동선언 이후 종교인 등 민간교류에 성과가 있었음.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건의함.

- 남북정상회담에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합의한 이래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가 나타났음.
 - 언론사 사장단 방북, 3개 방송사 방북 취재, 남북교향악단 서울합동연주회, 우리측의 백두산 관광단 파견, 남북선수단의 시드니 올림픽 공동 입장, 기독교·불교에서의 공동행사 등
- 지난 1년동안 남북교류 접촉의 증대와 함께 그동안 장막속에 가려졌던 북한에 대한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마찬가지로 북한도 최근들어 신사고에 입각한 의식개혁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변화의 상징들이 나타나고 있음.
-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두 민족동질성 회복의 선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민족공동체 건설에 기여해줄 것을 바랍.

10. 이산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신 교환, 이산가족면회소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산가족문제는 이산가족들이 노령화되고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임.
 - 이러한 입장에서 출범초부터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설정,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결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이 교환되고, 시범적이긴 하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이 이루어졌음.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미 남북간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생사·주소확인과 서신교환을 확대하고 이산가족면회소가 하루빨리 설치되어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해 나갈 것임.

문서번호	회삼3120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1. .
공개여부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3과)
과 장	시 호
작 성	사무관 황정주

6.15 공동선언 1년 「각계 인사와의 대화」 결과보고

6.15(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남북공동선언 1년 「각계 인사와의 대화」 및 오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1. 개 요

- 일 시 : 2001. 6.15(금), 11:45-12:30
- 장 소 : 영빈관 1층(각계와의 대화), 2층(오찬)
- 참석자 : 144명
 - 당초 참석예정자 151명중 7명 불참

2. 각계 대표와의 대화(11:45-12:55)

- ① 남북관계 현황 보고(통일부 장관)
- ② 각계 의견 발표
 - 남북정상회담을 새로운 역사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할 것 건의(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 아울러 남북경제공동체 수립과 아시아공동체를 주창할 것을 건의

- 야당이나 국민의 반대가 있다면 설득해서라도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JTS 대표 법륜)
 -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정착에 기여, 현재보다 지원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 요망
-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도적이고 균형 잡힌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안보상의 허점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될 것임(정천구 영산대 교수)
- 6.15 공동선언 이후 종교인 등 민간교류에 큰 성과가 있었음.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언제 이루어질건지에 대한 확답을 희망함.(김성수 성공회 주교)
- 이산가족들간의 서신교환, 상설 면회소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이산가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건의(이산가족 박연진)
 - * 이산가족 이지연(방송인), 재북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③ 대통령 말씀

- 최근 남북관계가 약간 소강상태이나 포용정책은 반드시 실현할 것임.
 - 국민들도 소신을 가지고 햇볕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 진정한 화해·협력은 대북유화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우리의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며 미·일 등 유관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윈-윈 정책임.
 - 북측의 무력도발은 반드시 무력으로 응징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한 우리도 평화적으로 대응

- 대북지원은 하고 싶다고 해도 우리 여론이 주자고 해야지 할 수 있음. 일면에서는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바라는 여론도 있으나 대북지원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음.
- 김정일의 답방은 언제라고 확실히 밝힐 수는 없으나 합의를 한만큼 반드시 금년내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3. 오찬(13:10-14:30)

① 건배 제의(조영식 통일고문회의 의장)

- 남북화해협력의 큰 물을 열어주신데 감사함. 지금 1년도 다시 시작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역사의 소명을 빠른 시일내 풀어갈 것을 제의

② 각계 소감 발표

- 대북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함(김성훈 경실련통일협회 이사장)
- 정상회담을 통해 열은 남북화해협력의 길을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 고향투자뿐만 아니라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운 방문을 통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람(이우정 민화협 고문)
- 대북투자 사업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긴장감이 있었으나 차츰 신뢰감을 획득하였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을 기대함(현대아산 부사장)

③ 참석자 접견후 오찬 종료

문서번호	회삼31200-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1. 6. 20
공개여부	

작성부서	남북회담사무국(회담3과)
과장	심용창
작성	사무관 하태만

「민족통일대토론회 취재기자단 간담회 결과보고」

6.15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취재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 취재기자단 : 이충원(연합), 장일현(조선), 이영종(중앙), 김^석(문화), 김현경(MBC), 서수민(K·T)

1. 행사 평가

- 북측은 외관상 통일전선전술 형태를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남측 참여인사들을 설득할만한 유인효과나 유사 형태의 행사지속에 대한 결정권 全無(김현경)
- 5.1 남북노동절 공동행사는 온정리 인근주민들을 동원, 사전 연습을 통해 질서있게 진행된 반면,
 - 6.15행사는 평양에서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분과별 토론회 참석자를 제외하고는 개별행동을 하는 등 적극성이 없어 무질서한 느낌(이충원)
 - MBC 행사보도가 무질서하게 비취어 평양에서 모니터 하는 지도부의 질책을 우려하는 등 남측 언론보도에 관심(김현경)

2. 특이 동향

- 북측 고위인사들(김영대, 안경호, 허혁필 등)의 선글라스, 구두 등이 외제 유명 메이커(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귀족화 경향(이영종)

- 행사장 오찬장 및 금강산 합동산행 안내원들은 고려호텔 종업원들중 선발, 음식은 보통강 호텔에서 수송(서수민)

- 북측 인사들은 취재기자단에게 「차기대권 주자」에 대한 질문공세 집중(공통)
 - 통일부 인사이동에 대한 관심 표명

- 민화협 인사들은 KBS와 SBS는 방송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MBC도 입국비용을 내고 의향이 있다면 손잡고 하자고 언급(김현경)
 - * 김현경 차장은 입국비용의 高額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비즈니스 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일사업을 한다”고 일축

- 온정리에는 행사 2일전 내린 비로 남측에서 지원한 비표를 시비하기 위해 모내기 한창(이충원)

//끝//

문서번호	회삼 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7.5
공개여부	공 개

작성부서	외담 3과
과 장	심 용 창
담 당	행정사무관 김 영 일

노르웨이 적십자사 국제부장 방한관련 동향보고

1. 관련상황

- 6.29~7.3 북한(남포, 북-중 접경지대)을 다녀온 노르웨이 적십자사 하버 라우리첸(Halvor Fossum Lauritzsen) 국제부장이 7.4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총재 등 면담

* 라우리첸은 '95년 이후 7번 방북

- 한적 출입기자들과 노르웨이 적십자사의 대북지원, 북한의 경제 상황 등과 관련하여 인터뷰 실시

2. 주요 언급내용

① 북적 관련

- 방북시 조선적십자회 백용호 서기장과 김석철 부서기장겸 국제부장을 만나 향후 지원계획 등 논의

※ 종전 북적 서기장은 허해룡

<별첨> 백용호 경력사항

② 북한의 경제상황 관련

- 북한의 상황은 2000.11 이후로 진전이 없음
 - * 원재료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
- 추수할 때는 식량 사정이 호전되나 봄이 되면 식량난
 - * 과거 남한의 보릿고개와 유사한 상황
- 남한에서 지원받은 물품중 비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 * 식량생산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
- 그 밖에 식량이나 속옷, 재해에 대비한 담요나 창에 댈 수 있는 방한용 비닐 등 긴급구호물품과 의료기기 등 필요

③ 노르웨이 적십자사의 대북지원 관련

- 국제적십자사 연맹이 평안남도과 자강도, 개성 등 4개 지역에서 보건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노르웨이 적십자사는 의약품 지원 담당(대상인원 580만명)
- 북한 병원에 난방용으로 석탄을 공급, 2000년에는 28개 병원에 지원, 올해 146개 병원에 지원할 계획
- 또한,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기구 가방(first aid bag pack)도 지원할 계획
- 평양에서 2명의 노르웨이 적십자사 요원들이 활동(1명은 의사)
 - * 이들의 활동과 관련, 북한당국과 미리 협의를 하지만 자유롭게 활동, 노르웨이 본부와의 이메일을 통해 자유롭게 연락

<끝>

〈참고자료〉

백용호 경력사항

- 1980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사무총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국장
- 1983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서기장
- 1984 남북적십자 실무집측 북측대표
북적대표로 수재물자 인도차 인천항 래왕
- 1992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 1997 북경 남북적십자대표집측 북측대표
이집트 대사

김석철 경력사항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청소년부장

문서번호	회삼31200-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7. 12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부서	회담사무국(회담3과)
과 장	심 용 창
작 성	행정사무관 이성원

대북협상 유경험자 초청 간담회 결과보고

「대북협상지침서」 마련 관련 대북협상 유경험자(박창일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북녘돕기담당)초청 간담회(7.11, 16:20-18:20)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북측 협상 행태

- 협상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매우 중시
 - 첫 접촉에서 북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 사업 추진에 긴급요
 - * '關係'를 중요시 하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
-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협상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 특징
 - 상부로부터 부여받거나 보고·승인을 받은 목표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대체로 강한 경직성을 보임

- 일반적으로 공식협상에서는 다소 비타협적이나 비공식회합에서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
 - 비공식적인 식사, 술좌석 등을 적절히 이용하면 효과적인 협상성과 획득 가능
- 협상의 주도권 확보, 협상성과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
 - 부여된 임무완수를 위해 자기측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대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

2. 대북협상시 유의사항

- 북한체제의 본질과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가부장적 사회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
 - * 조직·인물에 관계없이 동일한 논리·주장·협상태도 노출
 - 북측 협상대표는 실질적인 결정권이 전무한 철저한 대화일꾼으로서 부여된 임무 밖의 대화는 무의미
 - * 공식인물보다는 측면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
- 협상에 앞서 확실한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과정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
 - 무리한 대가요구 등 협상을 어렵게 이끌어 갈 경우, 협상중단 의사표명 등 강한 반발을 보이는 협상기법도 유용

- 협상에 임할 때 줄 수 있는 카드, 합의 할 수 없는 사항 등 확실한 입장을 갖고 대처
- 북측의 협상의도를 파악하고 북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을 제시

※ 지난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행사시 북측이 통일연대측 인사 6명의 망북불허를 구실로 우리측인사 6명의 장전함 입함 불허를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이 '철수 불사' 입장으로 대처함으로써 북측 주장을 철회시킨 것이 좋은 사례

○ 협상과정 · 결과 등의 언론노출 문제에 유의

- 잘 성사된 협상도 언론의 사전보도로 무산될 수 있으며, 차기협상에도 어려움 초래

○ 약속 이행을 통한 북측 대표들의 신뢰 확보

- 약속한 사항의 실현여부는 북측대표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로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

※ 이행이 불확실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금물

- 협상대표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실적제공

○ 용어 사용에 유의

- 협상도중 중요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 이질감을 느낄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단어의 개념을 확인
- 일상사용되는 북한의 언어를 적절히 구사하는 것도 협상분위기 조성에 도움

3. 남북대화 관련 최근 득문사항

- 지난 3월 이후 김용순 비서와 김정일 위원장과의 관계 소원
 - 금강산사업의 부진에 따라 북한 대남사업파트와 국방위원회간의 헤게모니 다툼의 결과로 보임
 - 적십자회담은 준비하고 있지 않음
 - 금강산 육로관광 문제는 상급회담에서 합의한 후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
 - 상급회담은 공식적으로 준비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물밑에서 준비 진행 중
- ※ 상기내용은 6.16 금강산재토론회시 신뢰할만한 북측 인사로부터 지득

<언론대책 : 비공개>

☐

남북농민 공동행사 관련 동향

2001. 7. 16 회담3과
작성 : 5급 하태만

□ 행사관련 실무회담(7.9~11, 금강산)결과 합의 내용

- 일시 및 장소 : 2001.7.17-19, 금강산
- 참가인원 : 남측(667명), 북측(600명)
- 행사내용
 -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통일연단
 - 남북예술인 축하공연
 - 줄넘기, 사람 및 물건찾아 달리기, 윷놀이, 씨름, 밧줄당기기, 조국통일 이어달리기, 물동이 이고 징검다리 건너기
 - 금강산 관광
 - * 「전농」은 동행사시 방승차량 1대 및 행사용품(리셔츠, 바지, 운동화, 천막 등) 무상지원 예정

□ 7.16 현재 진행 상황

- 동행사에는 8·15동공행사 추진본부 대표 7명, 여성계, 청년학생추진위도 동행 추진중이며,
 - 노동계도 참관단 파견을 추진중이나 「전농」측에서 난색 표명
- 해금강 호텔 사용불가로 인한 참가인원 제한(300명:설봉호 숙식가능) 및 현대측의 17일 설봉호 운행 불가 입장으로 동행사 일정 또는 내용 변경(규모 축소등)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 * 이와 관련 「전농」에서 현대 유단 성명서 발표(7.14)

남북 농민 통일대회 관련 동향 보고(2)

2001. 7. 18 회담3과

작성 : 5급 하태만

□ 행사명 :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

□ 참가자

남측 :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등 680여명(참관단 40여명 포함)

북측 :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등 약 600명

□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1.7.18(수) 금강산 온정리 및
'김정숙휴양소' 앞 운동장

□ 행사 주요 내용

○ 개막식 및 통일연단 행사(오전 9 시경 시작)

- 개막사

- 남북 예술단 개막 축하공연 : 소리타래·칭보리사랑(남),
김길화(북) 등

- 개막식 주요 참석자 :

남측 : 전농의 정광훈 의장, 정용기·정현찬 부의장, 김순옥
전여농 회장

북측 : 농근맹의 승상섭 위원장, 김명철 부위원장, 김승현
국제부장

※ 개막사 요지:

〈정광훈 전농의장〉

- '조국이 분단된지 55년만에 성사된 남과 북 농민 대중의 첫 만남은 통일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
- '6.15공동선언 이행의 실천을 위해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을 총동원, 민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체가 되어 영광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라고 언급

〈승상섭 농근맹 위원장〉

- '북과 남의 농민들은 자기들의 근면성과 땀을 아낌없이 땅에 바쳐가듯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구슬땀을 바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민속경기 및 체육경기 (오후 2시경예정)

- 오후 2시부터 혼성으로 '자주팀'과 '단결팀'을 구성
- 씨름, 윷놀이, '조국통일 이어달리기' 등 민속놀이와 체육경기 예정

남북 농민 통일대회 관련 동향 보고(3)

2001. 7. 19 회담3과

작성 : 5급 하태만

남북한 농민, 남북농민통일대회에서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연대조직 결성을 추진키로 합의

□ 행사 주요 동향

- 전여농(全女農), 설봉호 선상서 손도장 찍기 행사 거행
 - 남북농민통일대회 참가중인 전여농(회장:김순옥) 소속 전원이 한반도 통일지도 위에 손도장 찍기 이벤트 행사

-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농민연대회의」 결성 추진
 - 18일 남측 흥번 전농 조국통일위원장이 통일연단 토론자로 나와 「 남북농민연대회의」 구성을 제의
 - 양측은 행사 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동 조직 결성 추진을 합의
 - ※ 이와 관련, 지난 3월 한국노총·민주노총 과 직총간에 남북노동자 통일 연대기구인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약칭 통노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음

- 7.19 오전 금강산 공동 산행후 남측 참가단 귀환(15:00경 고성항 출항)

□ 행사관련 기타 동향

- 북측은 8개도 농근맹 의장 전원이 참석하는 등 이번 행사를 상당히 비중있게 추진
 - ※ 북측관계자들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자고 하면서 “농사 현지지도 때문에 행사 준비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

- 범민련·범청학련 관계자도 참가
 - 동 행사에는 박준영 범민련 남측본부 연대사업부장 등 3명과 김혜신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등 4명도 전농 소속으로 참가

- 금강산 해상호텔 폐쇄 및 설봉호 숙박인원 제한으로 일부 남측 참가자(420명 정도)들은 온정리 임시거처(기사대기용 컨테이너 박스 개조)에서 숙박

남북 농민 통일대회 관련 동향 보고(4)

2001. 7. 20 회담3과

작성 : 5급 하태만

□ 공동보도문 채택·발표(북한방송요지)

-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확고히 하고, 남북 통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야 한다는 데 대한 결의 확인
- 농민들이 노동자와 함께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의 주력군임을 내외에 선포
- 남북의 농민들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관철하기 위해 남북농민들의 통일연대조직 결성문제 협의 추진을 합의
- 올 8.15에 평양에서 민족통일 대축전이 전민족적 범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위업 실현에 적극기여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북측에서는 8.15행사 평양 개최를 주장·강조)

□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1차 대표자회의 관련 남북노동자 실무협상 진행

1. 「통노회」 강령, 규약 초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차 대표자회의 일정과 진행 경과는 남측 판단에 따라 추진
2. 「직총」은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양대 노동 지도자(10-15명)들을 초청
3. 산별, 지역별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통노회 차원으로 일원화 하되, 내용은 6.15공동선언을 지지관철하는 방향에서 진행 등 3개항을 합의

□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민족통일축전운동 북측준비위”간 8.15공동행사 관련 협의 진행

- 8.15 공동행사 개최장소와 관련 남북 실무대표간 의견 차로 성과 없이 종료
 - 남측은 서울·평양에서 동시개최를 촉구하였으나, 북측은 평양 개최 기존입장(7.9-11민화협 접촉시) 고수
 - 차기접촉은 7월말~8월초 평양에서 개최기로 합의
- 「청년학생」 및 「여성계」등 개별단체간 접촉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추후 재 확인 예정)

2001민족통일대축전행사 관련 추진본부

설명회 참석 결과보고

2001.7.25 회담 3과

작성 : 5급 하태만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2001 민족통일대축전」행사 추진 관련 설명회 참석 결과 보고입니다

I. 설명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1. 7.24(화) 회담사무국 회담장(2층)
- 참석자
추진본부 : 이승환 민화협 사무처장, 김창수 민화협 정책실장
부 내 : 유종렬 제1정책담당관, 심용창 회담3과장,
백태현(교류협력국), 이승신(정책1),하태만사무관
부 외 : 국정원 실무자 2명

II. 주요 내용

-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측 8월 통일행사 사업계획안
설명(이승환, 김창수)
 - 추진본부 내부회의 결과 도출된 잠정적 사업계획(안) 설명
 - 소요예산 정부 지원 요청

○ “2001민족통일대축전본행사” 관련 추진본부측 입장 설명

- 복잡한 정세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반드시 서울·평양 동시 추진
- 개폐막식은 3대헌장 기념탑 앞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
- 북측 준비위 또는 여타 다른 단체가 남측의 단체·개별 인사들을 독자적으로 초청하는 일이 없도록 북측에 요구
 - ※ 개별 행사시에도 남측 추진본부를 반드시 거쳐 초청장을 보내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창구 단일화가 깨질 경우 사실상 남북공동 행사 불가능
- 7.27-8.1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실무접촉은 제반 여건을 고려 대표단 규모 축소(7명 내외)

○ 정부측 입장 설명(정책 1담당관, 회담 3과장)

- 8.15통일축전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관철하도록 하되, 차선책 으로 금강산 지역 공동행사도 가능
- 평양에서 개최되더라도 3대헌장 기념탑 제막식이 축전행사에 포함되거나 기념탑 앞에서 축전행사 진행은 곤란
 - ※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최종 확정시 추진본부측에 설명 예정
- 소요예산 정부지원 문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기본적으로는 민간단체인 추진본부측의 모금 등 자력적인 해결노력이 중요

IFRC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 방문관련 동향보고(1)

2001.7.26(목)
회담3과 5급 김영일

- 국제적십자연맹(IFRC) 디디에 세르피텔 사무총장이 7.31(화)~8.4(토) 4박5일간 방북 직후, 중국을 경유하여 8.4(토)~8.6(월) 2박3일간 방한할 예정
 - 세르피텔 사무총장은 동북아 5개국 적십자사와의 교류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몽골, 중국, 일본 등 순방중
 - * 몽골(7.21~25), 중국(7.25~31), 북한(7.31~8.4), 한국(8.4~8.6), 일본(8.6~9)
 - * 세르피텔 사무총장은 '99.10 취임후 2000.2 방한, 방북은 이번이 처음

- 방북시 평양에 상주하는 IFRC 요원(7명)의 활동현황(보건, 재해분야 등) 점검, 북적 관계자 접촉 예정
 - * IFRC는 '95년 이후 식량 및 보건분야 대북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북한에는 7개분야에 IFRC 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2명의 요원 총원 예정

- 방한일정
 - 8.4(토) 21:40 인천공항 도착
 - 8.5(일) 오전 민속촌 등 관광(장소 미정)
18:00 한적총재 주최 만찬
 - 8.6(월) 10:00 한적총재 예방
 - * 북한상황 설명 및 대한적십자사와 IFRC간 교류협력방안 협의
 - 11:00 기자회견(미정)
 - 14:00 외교통상부장관 예방
 - 14:30 통일부장관 예방
 - 15:30 출 국

<끝>

문서번호	회삼 31215-
보존기간	1년
보고일자	2001. 8. 6
공개여부	공 개

작성부서	회담3과
과 장	심 용 창
담 당	행정사무관 김영일

IFRC 사무총장 남북한 동시방문관련 동향보고(2)

1. 개 요

- 국제적십자연맹(IFRC) 디디에 세르피텔 사무총장이 7.31(화)~8.4(토) 4박5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8.4(토)~8.6(월) 2박3일간 방한
 - 동인은 동북아 5개국 적십자사와의 교류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몽골, 중국, 북한, 일본 등 순방중
 - * 몽골(7.21~25), 중국(7.25~31), 북한(7.31~8.4), 한국(8.4~8.6), 일본(8.6~9)
 - * '99.10 취임후 2000.2 방한, 방북은 이번이 처음
 - 방북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수원 외무성 부상, 장제언 북적 위원장, 백용호 북적 서기장 등을 면담하고, 개성과 판문점 및 평남지역을 방문
 - 방한시 한적총재 면담 및 기자회견, 통일부·외통부장관 예방(8.6)

2. 주요 언급내용

가. 남북관계 관련

○ 세르피텔 사무총장이 남북 적십자간 직접대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 북한 당국자들은 '이산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상황이 복잡하다.'고 답변(북-미관계 등으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라는 느낌)

나. 북한 상황 관련

○ 최근 북한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겪었으며, 가뭄으로 쌀 작황에도 영향

- 북측 인사는 '비가 많이 와서 개성 근처 건물이 무너져 4명이 부상했다.'고 언급

〈UN 인도지원조정국(OCHA)의 북한 홍수피해관련 보고서〉

- * WFP, FAO 등 UN기구와 NGO가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주선으로 8.2 황해남도 연안군과 배천군에서 실시한 공동조사시 북한 당국이 보고한 내용
- 7.29~8.1 집중호우로 황해남도 연안군, 배천군의 논 35,000ha중 17,450ha(49.8%) 침수
 - 정곡기준 65,278t, 금액으로 1,880만 달러의 쌀수확 감소 예상
 - 이번 홍수피해로 지난 7.27 FAO와 WFP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북한의 금년 곡물생산량 전망치 257만t(당초보다 12% 감소)보다 감소한 250만t(당초보다 14.4% 감소)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예상
- 이 기간 연안군에는 370mm, 배천군 432mm 강우량 기록
 - 연안군, 배천군의 600여 가수 침수, 운하 4,500m, 논둑 18,000m, 방파제 800m 유실, 기타 피해 집계중

다. 대북지원 관련

o IFRC는 대북 보건의료부문 지원과 관련

- 2000년에는 1,180만 스위스프랑 상당 지원

- 금년 12월에 2002년과 2003년 지원계획을 세울 예정

* 세르피텔 사무총장은 북한의 IFRC에 대한 의약품 지원 의존을 우려

o 대북 식량지원은 WFP나 UNICEF 등의 몫

- 이들 기구에서 올해 100만t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세르피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호소

3. 기타 특이사항

o 「8.12 제의」 30주년과 관련, 「한적」의 대북성명 발표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적」 총재는

- 경의선 남북 연결지점에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 서신교환, 남북적십자사간 만남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북측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아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끝〉

남북대화설명회 자료

남북관계 현황 및 추진 방향

2001. 7. 13

남북회담사무국

1. 남북관계 현황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분야별 회담 추진, 경제·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이산가족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진전

- 남북장관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 개최
 - 남북장관급회담(4회), 국방장관회담(1회), 경제협력실무접촉(2회), 적십자회담(3회) 등
 - * 3.13~16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측의 불참으로 연기된 이후 남북대화 소강상태가 지속, 그러나 6월들어 민간 차원의 6.15-8.15 남북공동행사는 활발히 진행

- 경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보장 등 4개 경험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6.15 공동선언 이후 금강산관광 이외의 방북인원이 8,000여명으로 과거보다 30배이상 증가
 - 남북교역도 4억 2500달러로 과거 1억달러 수준보다 4배이상 증액

-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
 - 세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방문단(3회), 시범적 생사·주소확인(2회), 서신교환(1회)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

2. 현 남북관계 상황 평가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일련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의 남북관계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예정된 회담일정이 지연되는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담보 상태
 -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가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 금강산 관광사업의 부진 등 현 상황에 대한 북한내부의 입장정리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데서 비롯됨.
- 남북관계에 다소 우여곡절은 있더라도 이제까지 축적되어온 성과, 내외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과거의 대결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
- 다행히 최근 들어 대내외 환경변화가 남북관계진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및 북미대화 재개 선언(6.6)
 -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합의(6.8) 및 미북 관광대가 송금(7.2) 등 남북관계 제약 요인 해소
 -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최 등 분위기 조성

3. 추진 방향

- ① 현재 남북대화 소강상태는 주변정세 변화와 북측 내부 사정에 원인이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
 - 회담이 재개될 경우 우선적으로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추진, 4대 경협합의서 발효, 금강산 육로관광 추진
 - 이와 함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논의
 - 정부는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 협상의제·협상전략 개발 등 회담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차분히 준비 중
- ② 남북관계 개선의 추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접촉과 교류를 추진
 -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남북간 교류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 6.8 현대-아태간 금강산관광 활성화 합의는 남북관계 타개 및 교류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 6.15-8.15 남북공동행사들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 지난 6.15 금강산 토론회 개최후 남북은 공동보도문 발표를 통해 6.15 공동선언 실천과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재확인

③ 남북관계의 모멘텀 유지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지속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
- '01년 상반기 중 국내지원은 총 1억 65만불, 그 중 정부 지원이 6,555만불, 민간지원은 3,510만불 차지
-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화해 의지를 전달하고,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 전환 계기로 활용
- 금년의 비료 20만톤 지원(5.2~6.9)에 대해 북한은 적극적으로 감사 표시 전달

④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한미공조 강화

- 정책추진과정에서 여야의 다양한 의견 및 언론의 지적 등을 폭넓게 수렴
-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